

환경 분야
사회적 경제의
쟁점과 과제

2019.4. 1 (월)
14:00~17:00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
2019 제9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사회적 경제 순환과 회복의 경제를 꿈꾸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HanKyoreh Economy & Society Research Institute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KS도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Korea Central Council of Social Enterprise

행복나래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목 차

프로그램	2
인사말 유영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공동대표	3
기조강연 생태적 경제로의 전환과 사회적경제의 역할 정건화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5
발제1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현황과 전망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자원순환사회적경제연구소 소장	37
발제2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가능성과 과제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	49
발제3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법·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지현영 환경재단 아시아환경센터 국장 겸 변호사	59
패널토론1 대기업 김민석 LG전자 CSR팀 부장	75
패널토론2 당사자 김형수 사회적기업 트리플래닛 대표	85
패널토론3 국제이슈 김정태 MYSC 대표	87
패널토론4 사회적경제조직의 SDGs 김형미 재단법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	97
전체토론	105

프 로 그 램

	제목 및 발표자
개회 14:00~14:10	인사말 유영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공동대표
기조강연 14:10~14:40	생태적 경제로의 전환과 사회적경제의 역할 정건화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제1 14:40~15:05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현황과 전망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발제2 15:05~15:30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가능성과 과제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
발제3 15:30~15:55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법·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지현영 환경재단 아시아환경센터 국장 겸 변호사
휴식 15:55~16:10	휴 식
토론 16:10~17:00	좌장: 정건화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대기업] 김민석 LG전자 CSR팀 부장 [당사자] 김형수 사회적기업 트리플래닛 대표 [국제이슈] 김정태 MYSC 대표 [사회적경제조직의 SDGs] 김형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인 사 말

유 영 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공동대표)

먼저 3년차를 맞는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주관 및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기관과 단체를 비롯하여, 기조강연 및 발제 그리고 토론에 참여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장군의 위세에 눌러 움츠리고 있던 새싹들이 파릇파릇 고개를 내밀며, 봄이 어느덧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봄소식에 설레 이는 마음 가득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세먼지라는 불청객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힐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사회적경제 포럼은, 사회적경제의 사회문제 해결 역량을 점검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함께 고민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의 병폐와 모순을 극복하는데 매우 유효한 경제수단이지만, 아직은 우리사회의 사회적경제 역사도 짧고, 역량이 부족하기에 다양한 영역에서의 실험과 도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 분야는, 인간을 포함하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며,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인간은 환경보존에 가장 악영향을 주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환경 파괴로 인한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우리 모두는 환경문제 해결을 더 이상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각각의 개인과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이기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회적경제가 문제 해결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창의적인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산적해 있는 환경문제 해결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도 사회적경제를 통하여 환경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에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수평적인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다양한 환경이슈도 해결하며, 사회적경제의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적가치 실현에 한발 더 다가서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초강연

생태적 경제로의 전환과
사회적경제의 역할

정건화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생태적 경제로의 전환과 사회적 경제의 역할

정건화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제9회 사회적 경제 정책포럼(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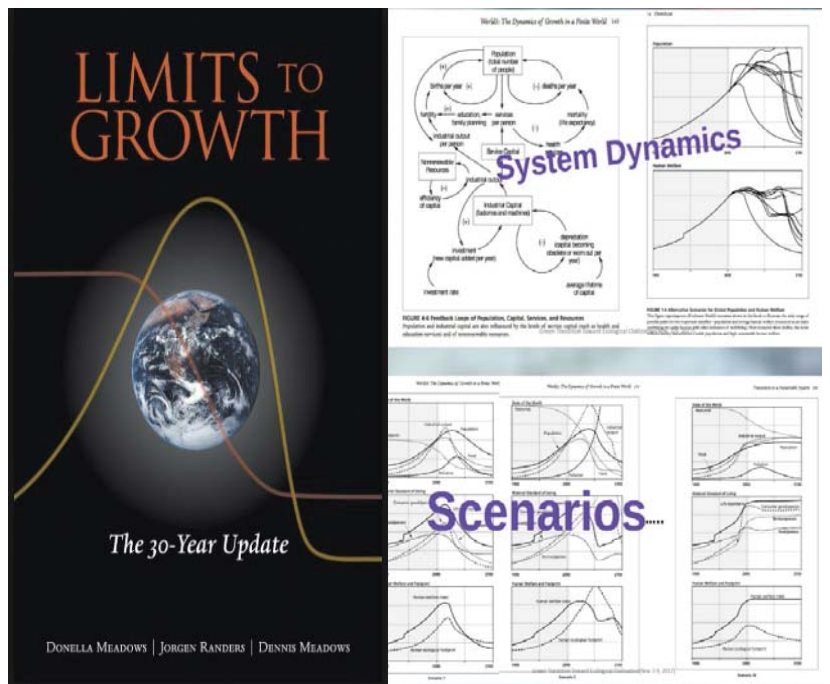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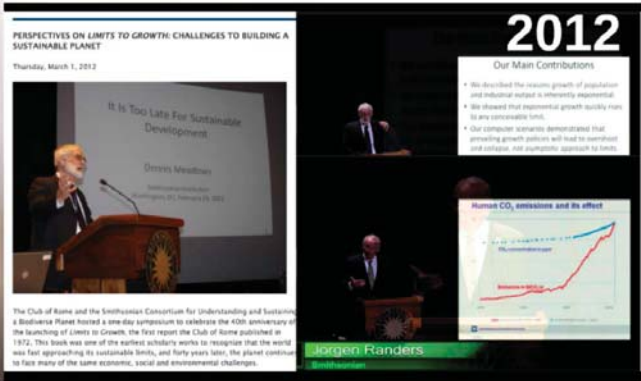
1. 성장의 한계(1972년), 그후 반세기
2. 문제는 경제다 -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시급성
3. 생태적 경제(학)을 위하여
4. 생태적 경제로의 전환과 사회적 경제

1. 성장의 한계(1972년), 그후 반세기

1972년 로마 클럽의 보고서, '성장의 한계(Limits of Growth)'

- 미국MIT공대 연구팀이 2년여 기간 동안 '시스템즈 다이내믹스'(Systems Dynamics)라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분석모형을 만들어 분석한 보고서.
- 연구그룹은 12개의 세계 모형을 바탕으로 100년 후의 미래를 예측
- '당시 추세로 인구와 산업, 자원 이용 및 오염이 지속되면 지구는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고 인구와 산업의 생산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감소할 것'이라 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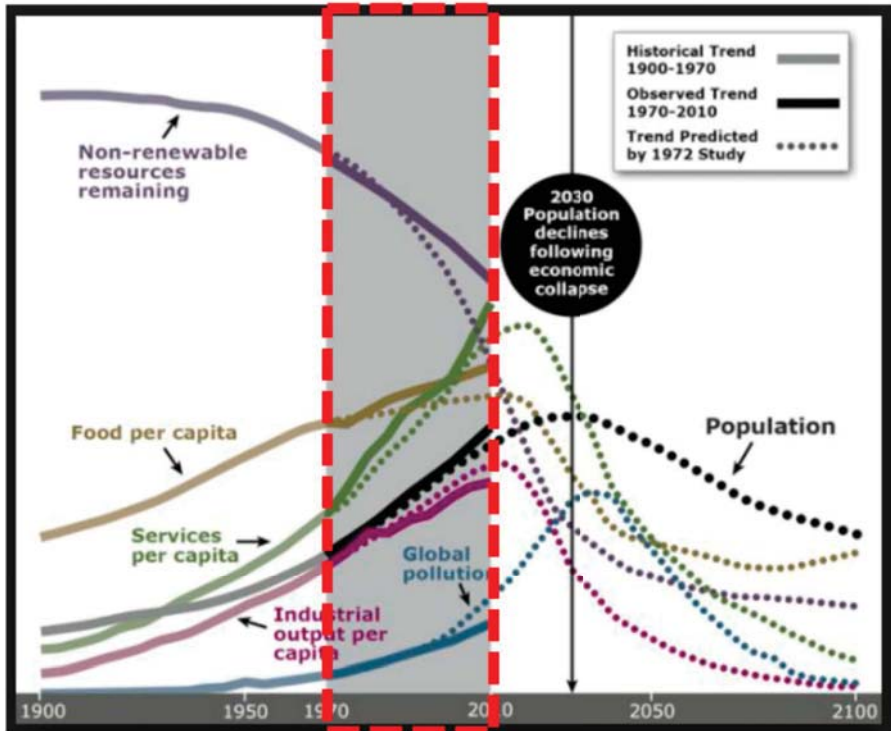


제9회 사회적 경제 정책포럼(2019)

- “성장의 한계”는 단순히 하나의 미래경로를 예견한 보고서가 아니라 <현상유지>, <개선>, <개혁>이라는 세 가지 가정을 두고 2100년까지 사회를 변화시킬 5가지 핵심 요소의 궤적을 따라 미래를 예측
- 2012년 봄 ‘로마클럽’과 미국 ‘스미소니언협회’가 공동개최한 “성장의 한계” 출간4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움에 '성장의 한계' 생존 저자들이 참여. 백발의 노인이 된 두 저자도 참석. 인류가 지속 가능한 시대를 만들 수 있던 시기는 이미 지났으며 이제 너무 늦었다라는 비관적인 견해 표명 (Understanding and Sustaining a Bio-diverse Planet. 2012년 3월1일).
- 데니스 메도우즈(Dennis L. Meadows)는 ‘지속 가능한 개발은 너무 늦었다’를, 요르겐 랜더스(Jørgen Randers)는 ‘성장의 한계를 촉진한 지난40년간의 교훈들’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Consortium for Understanding and Sustaining a Bio-Diverse Planet’)

성장의 한계(1972년), 그후 반세기

- 이후 의도적으로 무시되거나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경고는 2008년 이후 다시 주목의 대상이 됨.
- 호주 출신 연구자 그레이엄 터너(Graham Turner)는 로마클럽의 예측과 비교해서 지난 30년간 (1970년-2000년) 데이터를 검증한 결과 40년 전 저자들의 <현상유지>경로를 따른 붕괴 시나리오를 따르는 것을 보여줌. (A Comparison of the Limits to Growth with Thirty Years of Reality).



제9회 사회적 경제 정책포럼(2019)

생태적 문맹(Ecological Illiteracy)의 심화(?)

- 생태와 환경문제에 대해 점점 더 둔감해지고 있는 현실.
- 앨 고어(Al Gore)의 <불편한 진실, 2006>은 큰 반향을 일으킴.
- 그러나 그후 여론조사(Harris Poll)결과들을 보면, '화석연료의 사용이 기후변화를 초래한다'는 데 동의한 비율은 2007년 71%, 2009년 51%, 2011년 6월 44%로 감소. 미국에서만 아니라 영국과 호주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남 (Klein, N.,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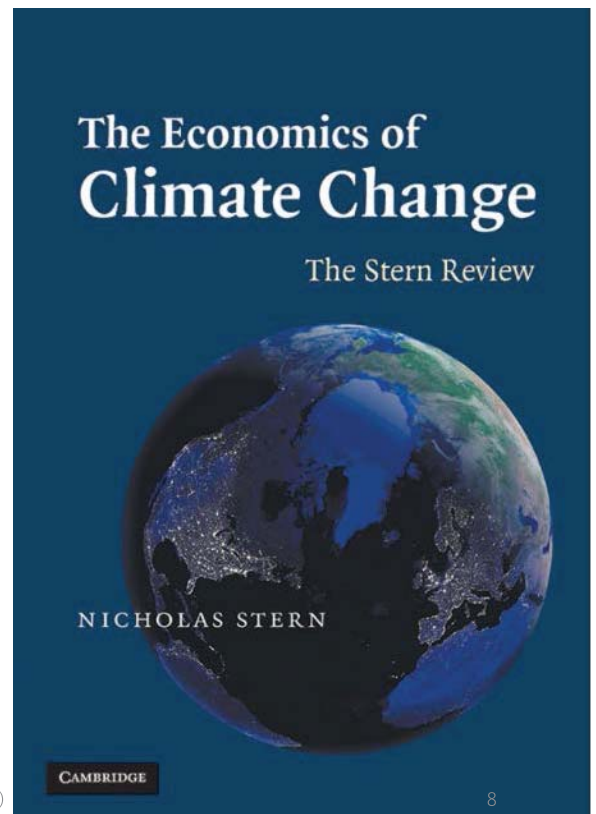


제9회 사회적 경제 정책포럼(2019)

7

스턴 보고서(Stern Review), 2006

-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영국의 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톤은 기후변화에 대한 7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
- 지금과 같은 방식의 경제, 사회적 행태가 지속되면 대공황이나 세계대전과 같은 규모의 파괴적 영향이 나타날 것. 이미 나타난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비용으로 매년 인류 전체 **GDP의 5%-20%**를 지불하게 될 것으로 추정.
- 지금 행동에 나선다면 최악의 효과를 피하기 위한 비용은 매년 전체 GDP의 1%정도이므로 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경제적 고려에서도 합리적 선택이라고 강조.
- 저자는 2016년, 보고서 **10주년 강연에** 참석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올라가고 있는 반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행하는 노력의 비용은 떨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부진하고 그 속도가 느린 데 강한 아쉬움을 표현 (Kahn, Brian,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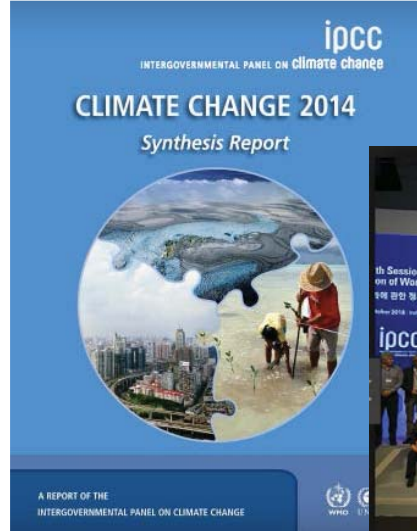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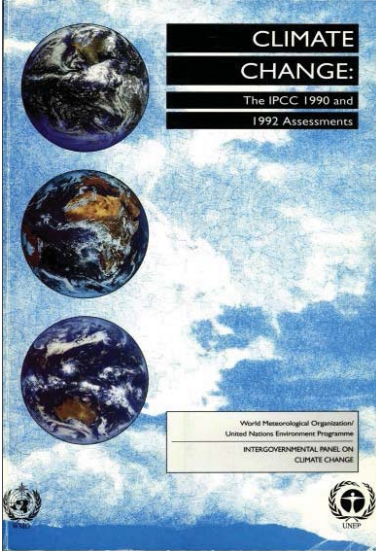


제9회 사회적 경제 정책포럼(2019)

8

생태적 문맹(Ecological Illiteracy)의 심화(?)

- 그후로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계속 늘어났고, 2011년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UN 기후 회의에서 캐나다의 스물한 살 대학생, 각국 대표들을 향해 '당신들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협상만 하고 있다'고 질타



IPCC(제48차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 총회 (인천 송도, 2018. 10월)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 채택



제9회 사회적 경제 정책 포럼(2019)

2019년 한국의 자회상

1인당 플라스틱 소비 세계 1위.. '쓰레기 산' 235개
경북 의성군의 쓰레기산.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1인의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kg으로 미국(97.7kg)을 제치고 세계 1위.. CNN에도 보도 /조선 2019.03.16. 03:02

2000년대 들어 살처분된 가축은 모두 9806만마리. 매년 544만마리. 방역사 1명당 가축 91만 마리(한겨레, 2019.02.23)



제9회 사회적 경제 정책 포럼(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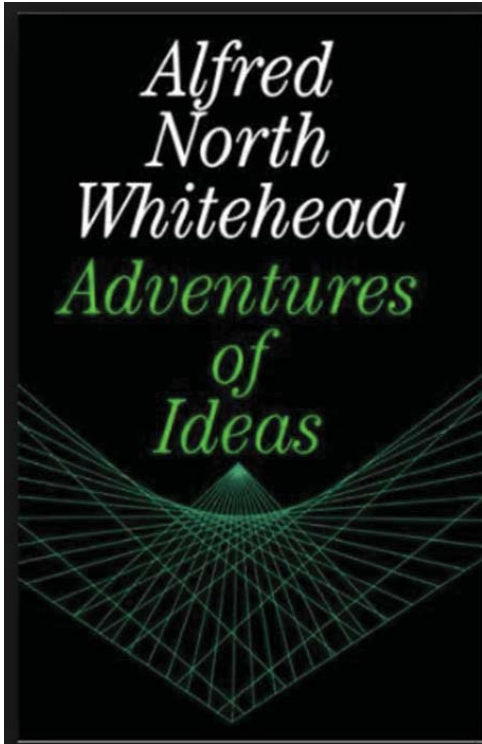
서울 초미세먼지 2015년 관측 이래 최악 (한국일보, 2019.2.1)

“초미세먼지 때문에 1년에 1만2000명 정도가 기대수명보다 일찍 죽는다는 연구결과가 국내 최초로 나왔다. 서울대 연구팀이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 기대수명, 질병, 생존기간 등을 조사해보니 2015년 한 해 동안 1만1900여명이 조기 사망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홍윤철 서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갑작스러운 사망을 초래한다기보다 사망시기가 수년 정도 앞당겨지는 것”이라고 매체에 밝혔다” (KBS 뉴스 (2018. 6.7)



제9회 사회적 경제 정책포럼(2019)

2. 문제는 경제다 -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시급성, 필요성



- “인류 역사에는 언제나 너무나 근본적이어서 인식하지 못한 채 넘어가곤 하는 이미지와 관념이 있어왔다. 그 이미지와 관념은 그로 인한 피해자들조차도 그러한 관념을 공유할 위험이 있다.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이 관념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문화적 서사가 달라져야 하기에 문명적 수준의 전환이 필요하다” (Whitehead, 『Adventures of Idea』)
- 어떤 시야, 세계관, 패러다임, 틀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 속에 이미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케이트 레이워스, 도넛 경제학:32)
-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자연은 무한하고 통제하고 지배 가능한 대상이고 인류는 자연계를 지배할 권리와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우리들의 관념의 전환이 필요

제9회 사회적 경제 정책포럼(2019)

13

- 뉴욕타임즈가 레이첼 칼슨의 <침묵의 봄(Silent Spring)> 이후 가장 중요한 환경 관련 저작으로 꼽은 <This Changes Everything> 저자 나오미 클라인은 ‘기후변화는 자본주의와 지구와의 전쟁’이고 자본주의가 언제나 아주 쉽게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진단

“이 전쟁은 벌써부터 진행되어 왔고, 매년 경제 성장의 필요성을 내세워 기후 행동을 미루고 이미 합의한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깨뜨리면, 자본주의는 이긴다. 위험성 높은 석유와 가스 채취 산업에 아름다운 바다를 내주는 것만이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면, 자본주의는 이긴다. ... 베이징에서 숨이 차 쉼쉼거리는 어린 자녀에게 귀여운 만화 주인공이 그려진 방진 마스크를 씌워 학교에 보내는 수고쯤은 당연히 감수해야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면, 자본주의는 이긴다. 어차피 우리 앞에는 채취냐 내핍이냐, 오염이냐 가난이냐 하는 암울한 대안만 남아 있다고 자포자기할 때마다, 자본주의는 이긴다” (나오미 클라인, 2014. 이순희 옮김, 2016: 45-46)



제9회 사회적 경제 정책포럼(2019)

14

요한 록스트롬(Johan Rockström), 행성적 한계((planetary bounda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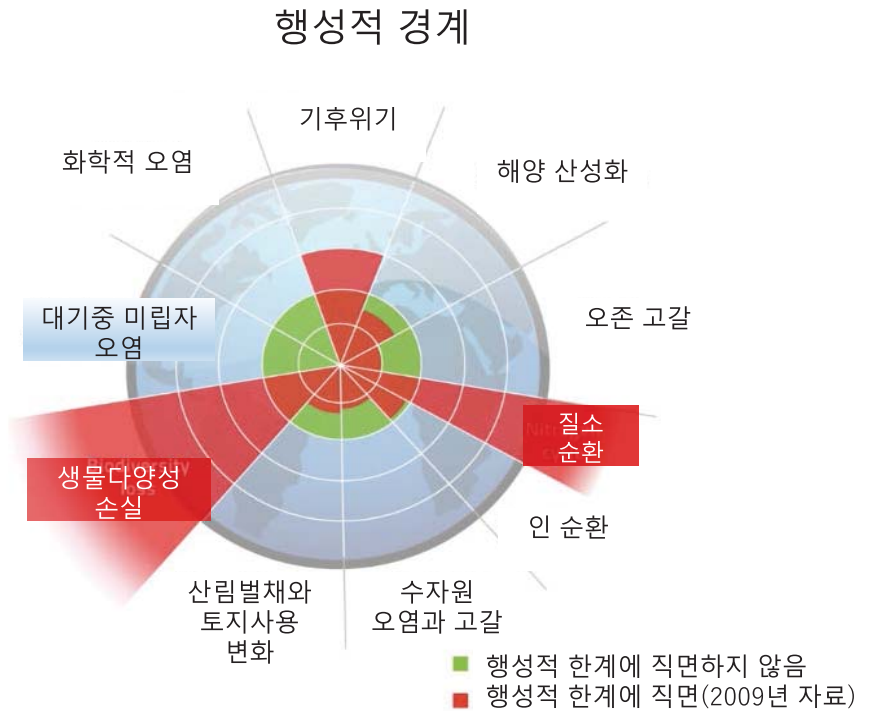
- 우리는 유한한 생태계에 속해 있고 유한한 세계에서 무한한 성장이란 불가능
- 지구 자원의 소비가 생물계의 수용 능력, 즉 지구의 **생태용량(carrying capacity)**의 한계를 넘어 변곡점(tipping point)에 이르면 지구 시스템의 회복력(resilience)이 손상되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임
- 특히 경제 시스템이 사용하는 '자원 흐름의 규모'가 커지고 '자원흐름의 독성'이 강할수록 자연 생태계의 부담과 피해는 커짐 (자원흐름에서의 '감량화'와 '탈독성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조영탁, 2013: 349).



제9회 사회적 경제 정책포럼(2019)

- UN 리우환경회의, 행성한계 개념 수용(9개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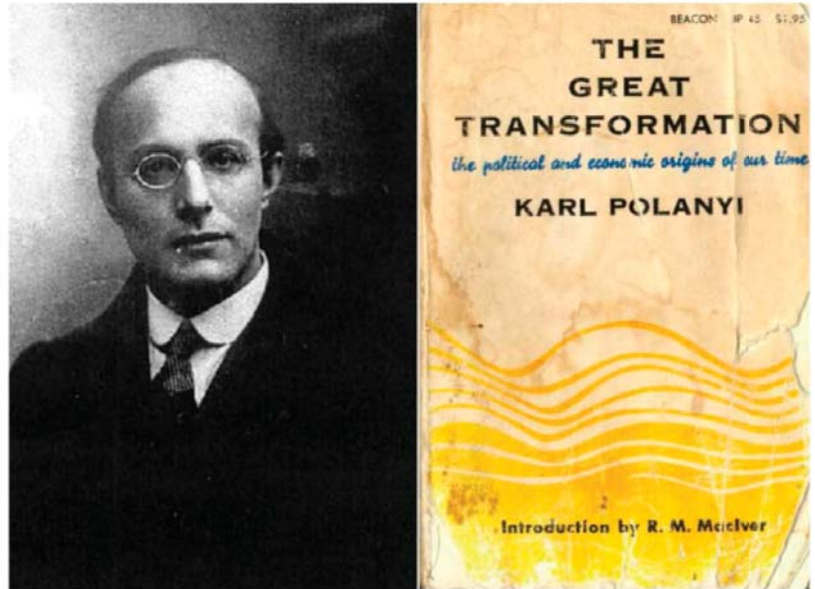
- 1) 기후변화 - 위험
 - 2) 해양의 산성화
 - 3) 오존 고갈
 - 4) 질소 순환 -한계직면
 - 5) 물 사용
 - 6) 토지 이용 변화
 - 7) 생물다양성 손실-한계 직면
 - 8) 에어로졸 증가
 - 9) 화학물질 오염
- 으로 구성
(Rockström et al., 2013).



제9회 사회적 경제 정책포럼(2019)

칼 폴라니(Karl Polanyi) 와 이중운동(Double Movement)

- 사회는 시장화 과정만이 아니라 그것을 제어하는 사회적 보호 (social protection) 의 과정이 작용함으로써 유지된다고 설명.
- 이러한 과정을 **이중운동 (Double Movement)**으로 명명 (The Great Transformation)



제9회 사회적 경제 정책포럼(2019)

17

- 2017년 서울에서의 제14차 국제 칼폴라니 컨퍼런스(10월13일) 개최. 폴라니와 생태위기 세션도 있었음
- 이중운동이 작동해서 생태위기를 완화시킬 시간적 여유가 과연 있을 것인가?

14th International Karl Polanyi Conference 'The Great Transformation' & Contemporary Crises



Hall B

Session03 Polanyi and the Ecological Crises 10/13(Fri), 9:00-12:00am

Chairperson: Lee, Byeong Cheon(Kangwon National University)

3-01 The developmental state's approach to sustainable transition: Institutional misalignments and wind power development in China
_Cai, Yifan(Graduate School of Geography, Clark University)

The prospect of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SSE) now possibly emerging in the post disaster affected areas of Tohoku, Japan
_Saito, Fumihiko(Graduate School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Ryukoku University)

Ecologization as double movement: The case of 'The one less nuclear power plant policy' of Seoul Metropolitan City, South Korea
_Lee, Sang Hun(Hanshin University)

A Polanyian View of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Against Developmentalism - Functionalism
_Hong, Gibin(Global Political Economy Institute)

II. Polanyi and Democracy in Complex Society

Hall C

Session04 Polanyi & Double Movement 10/13(Fri), 1:30-6:00pm

제9회 사회적 경제 정책포럼(2019)

18

교황 프란치스코의 생태회칙 (Laudato Si' (찬미받으소서),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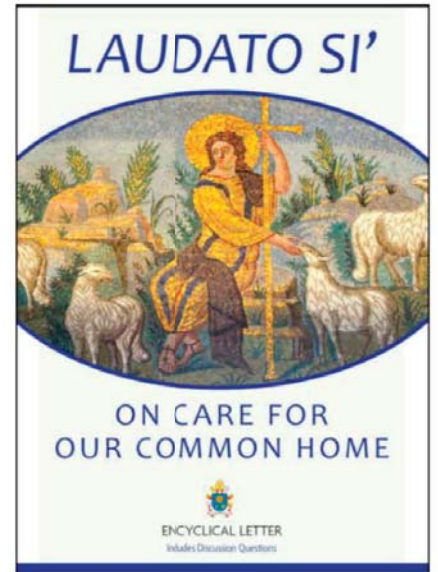
“성장에 한계를 부여해야 하고 경제의 의미에 대한 성찰을 통해 **너무 늦기 전에 (before it is too late)** 글로벌 경제의 발전모델을 바꾸어야 한다”

- Pope Francisco, ‘Laudato Si’ (2015)

“we need to think of **containing growth by** setting some reasonable limits and even retracing our steps **before it is too late**.. There is a need to change models of global development; This will entail a responsible reflection on **“the meaning of the economy”**”(193)

“Only when **‘the economic and social costs of using up shared environmental resources** are recognized with transparency and fully borne by those who incur them’ can those actions be considered **ethical**. (195)

제9회 사회적 경제 정책포럼(2019)



19

생태신학자 존 콕 (John Cobb), ‘One More Thing Before I Go (2014)’

‘경제학은 잘못된 인간관 (호모 이코노미쿠스)에 갇혀 있다. 이미 너무 늦었다 **(too late)** 그러나 얼마나 ‘나쁜 것’인가는 아직 우리 손에 달려 있다 **(not too late)’**

- John B. Cobb, “One more thing before I go”, 2016)

“we have already **passed** the point where changes in our behavior will prevent extensive decay. Now it is just a matter of how bad it will be”, “But ‘how bad’ is still a very important matter. It is too late to prevent extensive suffering. But it is **not too late** to make some differ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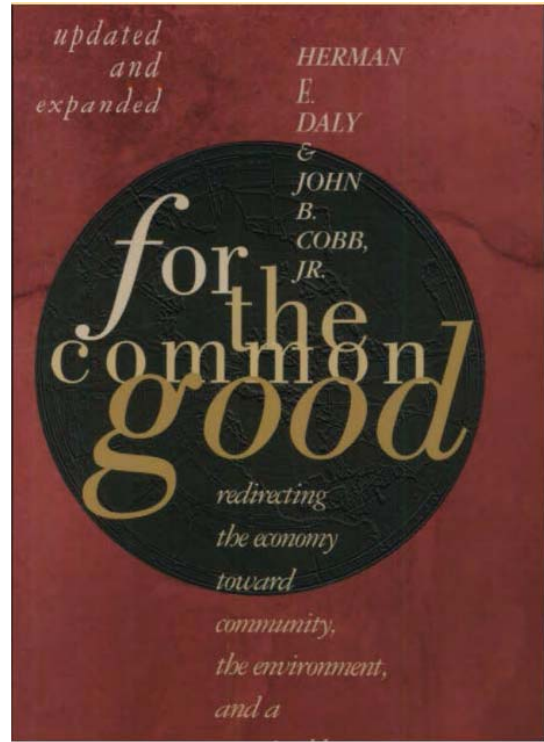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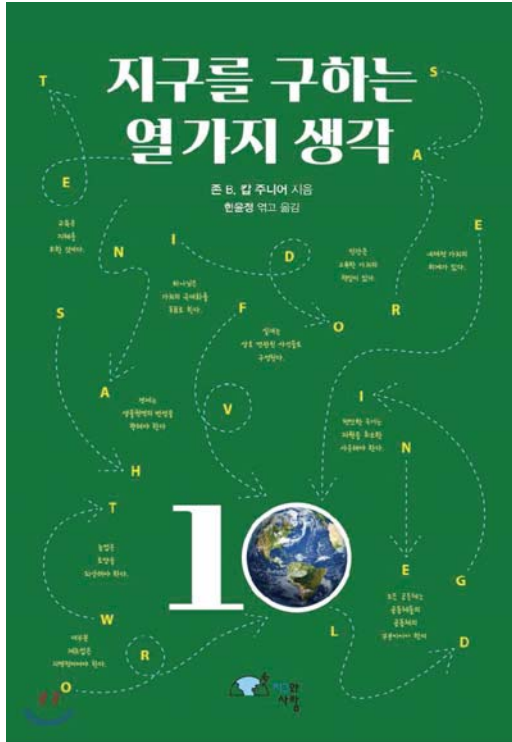
- John B. Cobb, “On the Importance of Thinking (and Rethinking)”

“**Economists lag behind** the physical scientists and still build on the notion of isolated individuals (*homo economi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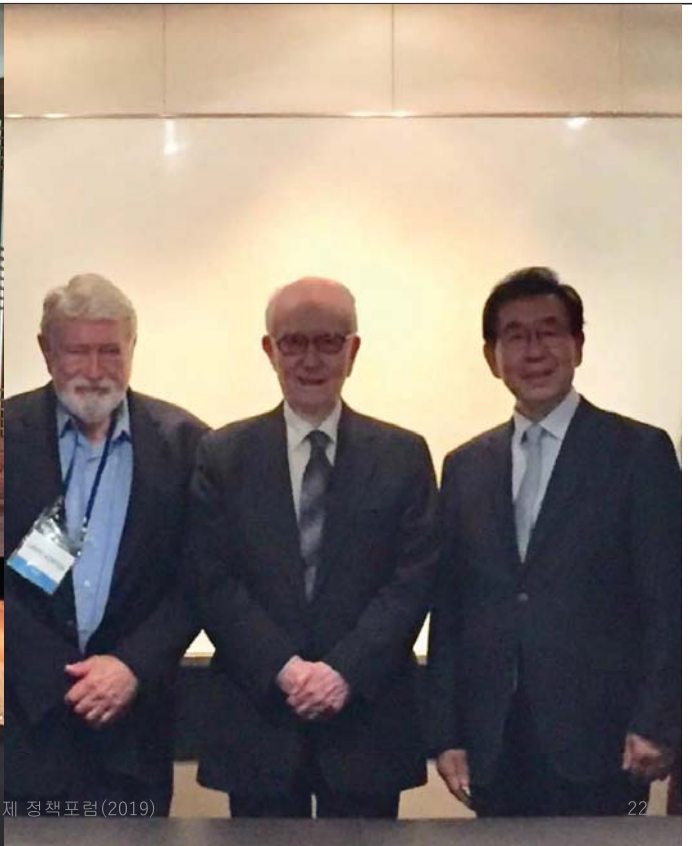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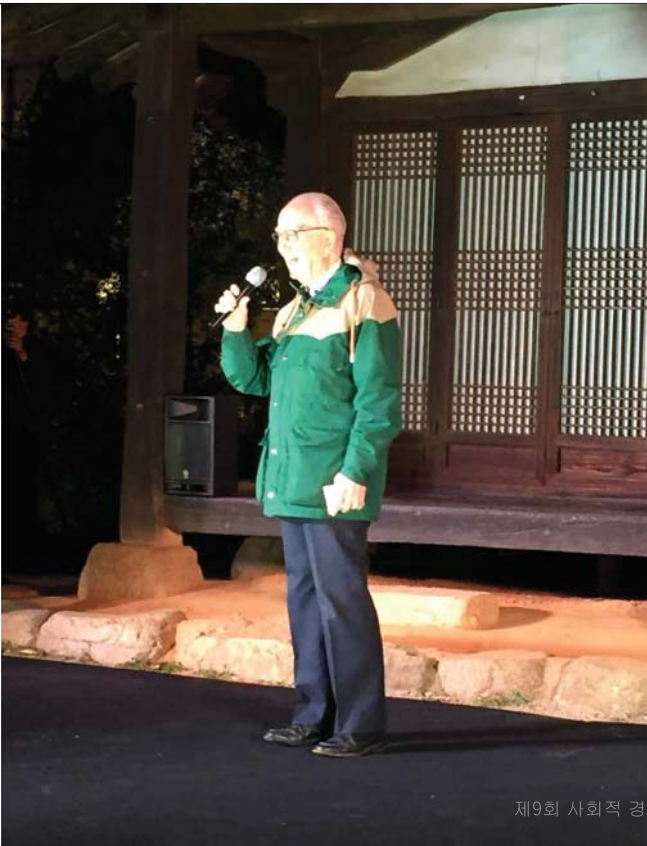
제9회 사회적 경제 정책포럼(2019)



20



제9회 사회적 경제 정책포럼(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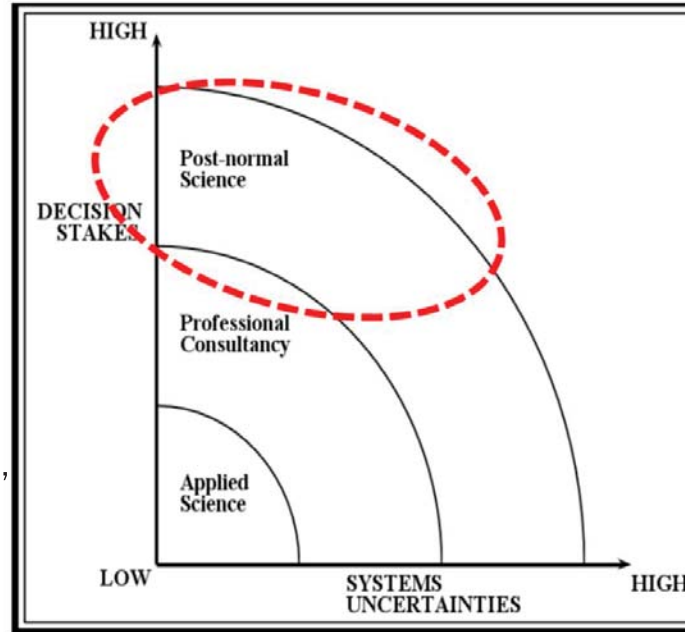
제9회 사회적 경제 정책포럼(2019)

포스트 정상과학의 시대 (Post Normal Science Era)의 뉴노멀(New Normal)

- 오늘날의 지식은 여러 측면에서 도전에 직면: **고령화나 경제성장과 생태적 지속 가능성간 균형**이 그러한 문제

- A. 사실 자체의 불확실성,
- B. 가치관의 충돌,
- C. 문제의 심각함,
- D. 의사결정의 시급함...

- **뉴노멀(New Normal)**이 필요한 시대
 새로운 경제 노멀(New Economic Normal),
 새로운 에너지 노멀 (New Energy Normal)
 새로운 기후 노멀(New Climate Normal)
 (Jermome R. Ravetz, 2006)



제9회 사회적 경제 정책포럼(2019)

23

100가지도 넘는 어려움들

-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과학의 영역**, 예컨대 과학기술이나 경제학 등에서도 이러한 총체적이고 통합된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음.
- 우리의 일상적 경험세계에서 지구계와 생물권의 순환과 생명의 그물을 온전하게 파악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움 (전쟁조차도 드론이 수행함으로써 **가장 처절하고 참혹한 현실과 온라인 가상현실이 구분되지 않는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생명과 자연, 지구와 우주를 아우르는 인식과 이해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 **사회적 한계와 행성적 한계의 착종**.. 환경적 스트레스가 심화되면 빈곤도 심화되고 그 반대도 작동. 빈곤을 해결하는 정책이 환경 천정을 훼손하기도 하고 환경을 해결하려는 정책이 빈곤을 심화시킬 수도 있음. 지구온난화의 책임이 개발도상국의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돌려지는 프레임도 이와 무관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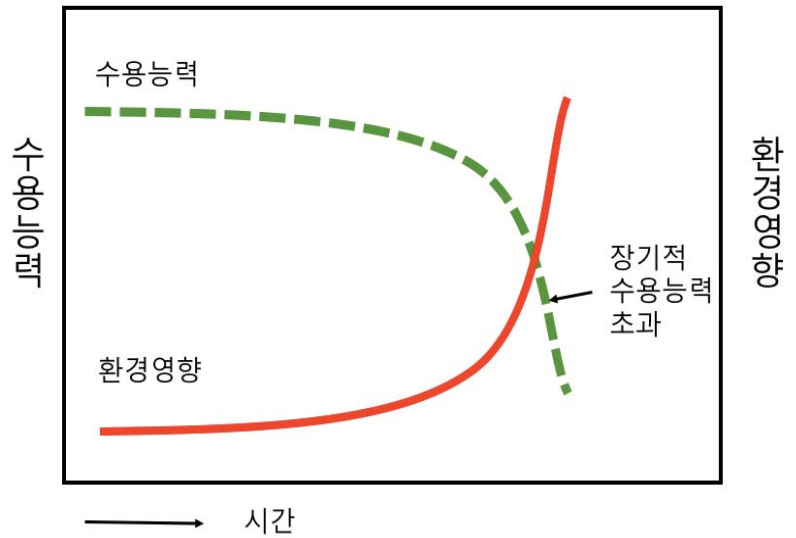
제9회 사회적 경제 정책포럼(2019)

24

- 우리가 익숙한 사회, 우리가 익숙한 문명의 '급진적 변화, 즉 **문명적 전환**' 필요. 전환은 지난한 과제이지만 그럼에도 궁극적으로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요구. 새로운 시스템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핵심은 생태문명, 생태 친화적 문명이 될 수밖에 없으며, **지구의 수용 능력 안에서 운용되는 생태적 경제가 되어야 함**

- 무한대의 이익, 무한성장을 추구하는 경제 대신 경제생활의 수용능력의 한계를 고려하고 지속가능성의 가치가 반영된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과 경제 조직, 그리고 새로운 경제 주체를 만들어내고 경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와 유·무형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

경제성장과 지구의 수용능력의 일반화된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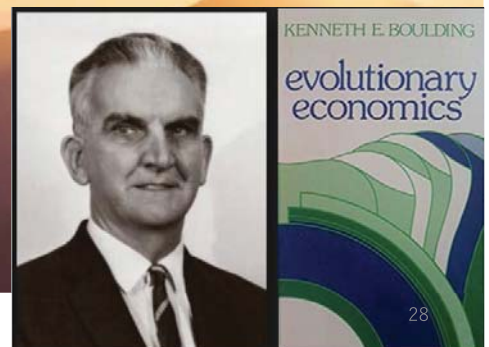
3. 생태적 경제(학)을 위하여

- 생태와 조화를 이루는 경제로의 전환은 어떻게 가능할까? **생태와 조화를 이루는 경제 시스템에 대한 상상과 전망**이 필요
- 경제학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있음. 아마도 언젠가 우리의 미래세대는 생태와 경제가 하나의 동일한 과정임에도 당시 세대가 왜 그렇게 **생태와 경제의 연관**을 파악하지 못했는지 놀라움과 의문을 가질 것이다. 이 간극을 연결하고 단절을 메우는 새로운 경제학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
- 핵심은 무한성장이 아니라 **‘Steady State’ 에 대한 성찰과 승인**. 아담 스미스, 칼 마르크스, 존 스튜어트 밀, 존 메이너드 케인즈, 칼 폴라니 등 사상/지성사에 큰 이름을 남긴 경제학자들은 모두 그 개념을 긍정적으로 수용

미국의 경제학자 케네스 볼딩(Kenneth Boulding)
 ‘유한의 세계에서 기하급수적인 경제 성장이 끝없이 계속될 것으로 믿는 자는 미치광이이거나 또는 경제학자이다’
 (US Congress House Hearings, Kenneth Boulding on Energy reorganization act of 1973).

Anyone who believes exponential growth
 can go on forever in a finite world is
 either a madman or an economist.

Kenneth E. Boulding



케네스 볼딩 (Kenneth Boulding), ‘무한 경제 vs. 유한경제’: ‘카우보이 경제(cowboy economy)와 우주인 경제(spaceman economy)’

- 미국의 경제학자 케네스 볼딩 (Kenneth Boulding)은 우주 속 행성 지구호와 태양에 의한 그 자연순환에 대해 인식. ‘우주인 경제(spaceman economy)’는 그중에서도 생태경제학의 탄생을 알리는 문제의식을 제시 (1966년). ‘카우보이 경제와 우주인 경제’를 대비.
- 경제를 자연자원에 대한 무한수탈과 추출, 끊임없는 소비가 특징인 경제(무한 경제)와 태양계의 행성인 지구처럼 모든 자원은 제한되어 있고 자원의 추출이나 오염의 수용한계가 존재하며 비록 부단한 에너지의 투입은 불가피하더라도 다른 자원들의 재생과 순환을 가능케 하는 생태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경제(유한 경제)로 구분. 또 전자의 경제는 사람들이 머리 속에 자리잡고 있는 관념으로서의 경제로서 ‘카우보이 경제(cowboy economy)’라 부르고, 후자는 미래 인류가 현실에서 직시하게 될 경제로서 우주인 경제(spaceman economy)로 표현 (Kenneth E. Boulding, The Economics of the Coming Spaceship Earth. 1966.

허만 데일리(Herman Daly)와 생태경제학(Ecological Economics)

- **Toward a Steady-State Economy**로 지속가능한 경제모델의 기초를 마련하느라 쉬임없이 노력해왔고 이 개념을 공론적 토론의 장으로 끌어냄으로써 ‘생태경제학의 기초를 제공 (Toward a Steady State Economy(1973), Steady State Economy (1977))
- 생태학에서 다루는 에너지 흐름과 물질순환을 경제학에서의 경제순환에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연결하려는 시도가 생태경제학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주류 경제학의 가장 **변방**에 머물고 있는 상황 (Costanza Robert, Herman Daly, Richard Norgaard et. al.,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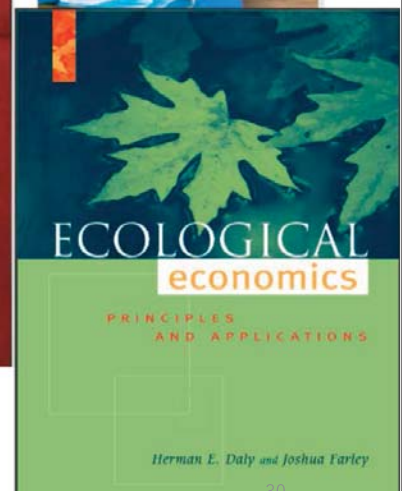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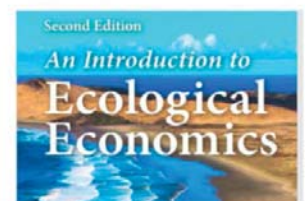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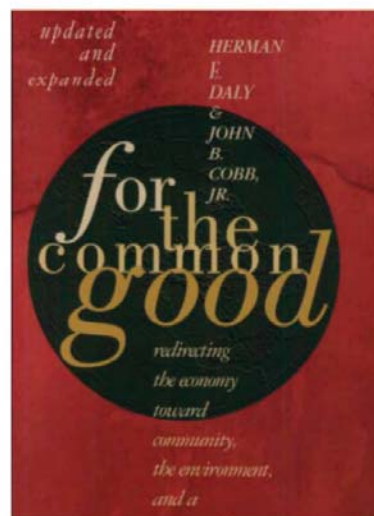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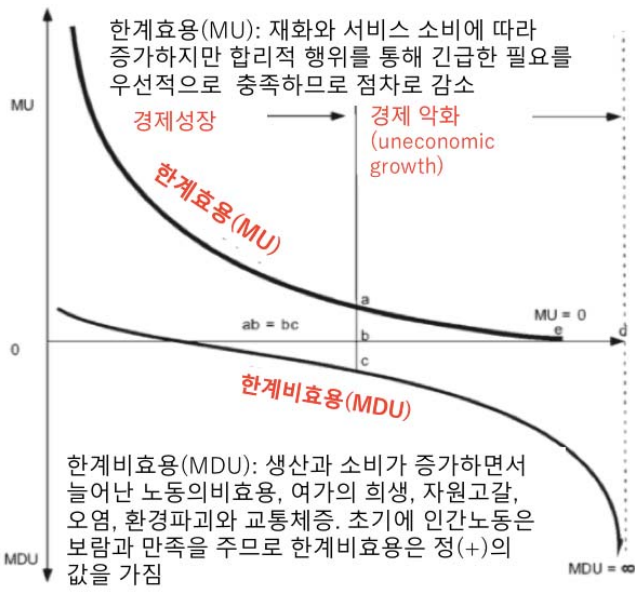


그림 거시경제의 성장한계



- b 지점은 적정성장 혹은 성장의 한계점이고 이후로는 성장의 한계효용이 한계비효용을 초과. 이후로는 성숙경제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적정상태나 정지 상태 혹은 평형상태와 같은 문구들이 긍정/능동적인 뉴앙스를 결여하고 있고,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이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아 1974년에 이 주제에 관해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모임에서 마침내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표현이 새로 등장 (WCC, 1974: 12)

b지점은 정(+)의 최대순효용점으로서 적정성장 혹은 성장의 한계점으로 한계효용(MU)과 한계비효용(MDU)의 크기가 같음. e 점은 futility limit 로서 MU=0, d 점은 MDU가 무한대로서 재앙적 한계점 .

제9회 사회적 경제 정책포럼(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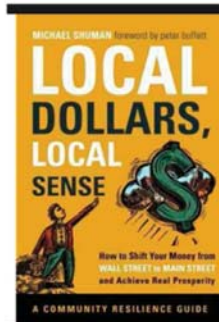
대안 경제학적 접근

Local Economy, Local Banking, Community Wealth, Cooperatives in the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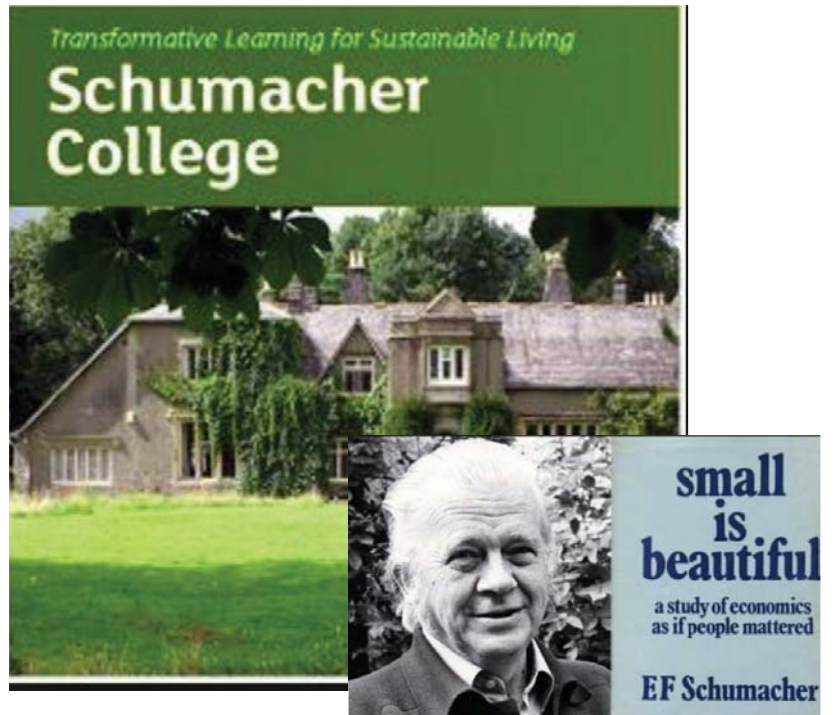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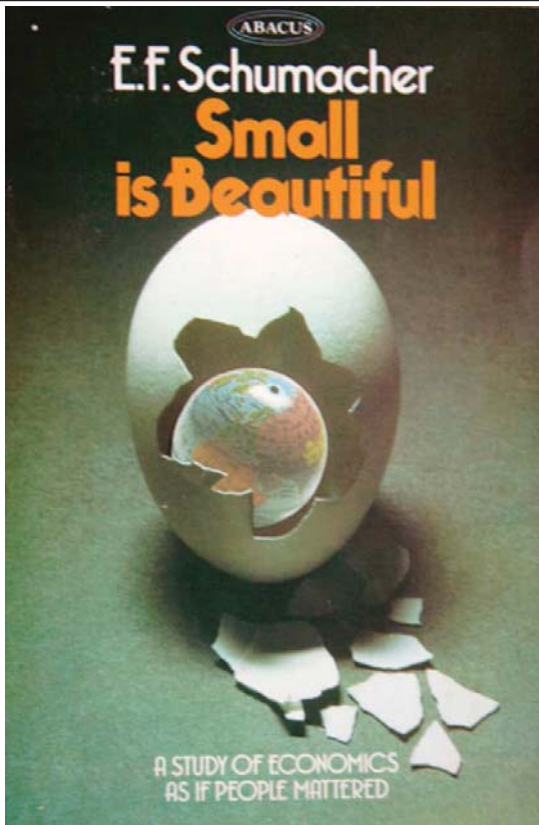
에른스트 슈마허(Ernst Friedrich Schumacher, <Small is Beautiful >, 1973)

헤이젤 헨더슨 (Hazel Henderson, <Creating Alternative Futures- The End of Economics>, 1977.

갈 앨퍼로비츠, 마이클 슈만, 데이빗 콜튼,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



제9회 사회적 경제 정책포럼(2019)



제9회 사회적 경제 정책포럼(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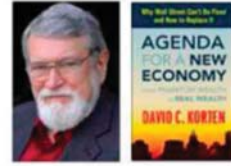
제9회 사회적 경제 정책포럼(2019)

Ecology & Local Economy for the Future The New Economy: A Living Earth System Model



David Korten's 10-Point Recovery Plan

1. Local and national food independence
2. Local ownership of enterprises
3. Energy independence with renewables
4. Balanced and fair trade relations
5. Walkable, bikeable communities with efficient transit
6. Strong middle class society – rebalancing wealth distribution; access to health care, education, etc.
7. Make Wall-Street's casino unprofitable – transactions tax, responsible capital ratios, surcharge on short-term gains
8. Community banks – reverse mergers and acquisitions
9. Money created by the federal gov't, not bank-issued debt
10. Federal government control of Federal Reserve – stabilize money supply, discourage speculation, contain housing and stock market bubb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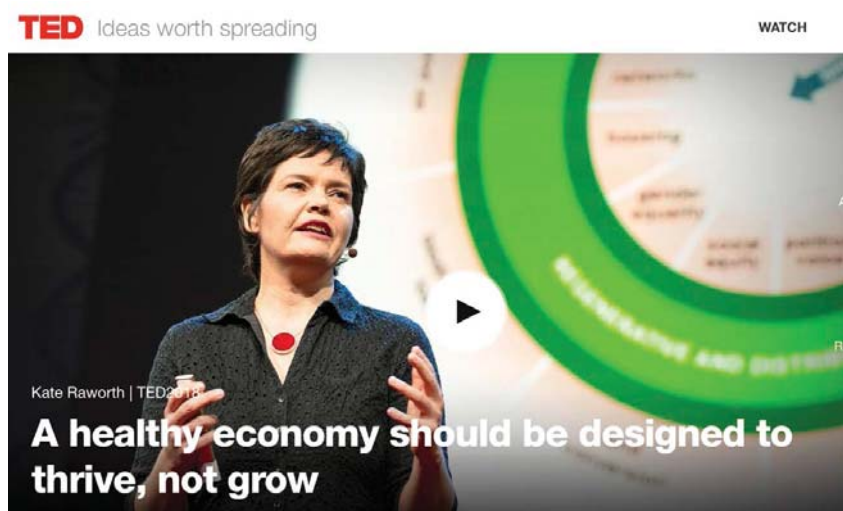
David Korten, *Agenda for a New Economy*, 2009

제9회 사회적 경제 정책포럼(2019)

35

케이트 레이워쓰(Kate Raworth), Doughnut Economics

- 옥스팜(Oxfam)이라는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기구에서 오래 활동하고 UN의 지속가능목표들(SDGs)수립에 참여
- 도우넛 경제학이란 저서에서 요한 록스트롬이 제시한 **행성 한계(planetary boundaries)** 개념을 보완, 우리들에게 익숙한 도넛 모양의 두 개의 원 사이에 인류의 경제 시스템이 운용되어야 함을 설명



제9회 사회적 경제 정책포럼(2019)

36

폴 새뮤얼슨의 20세기 경제학을 박물관으로 보내버린 21세기 경제학 교과서

도넛 경제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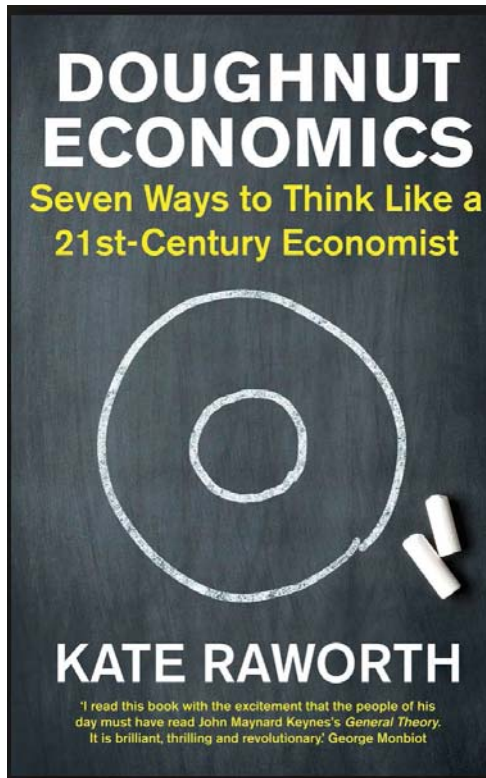
우리는 인류가 지구에 입힌 손상을 처음으로 깊이 자각한 세대이자 변명과 발전의 정의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세대다

케이트 레이워스 지음
홍기빈 옮김

- 에디지 파이낸셜 타임스 최고의 경제서 2017
- 포브스 올해의 책 2017
- 산데이 타임스 올해의 책 2017
- 프린스톤 리뷰 2018
- CEO 월동 시사 주간지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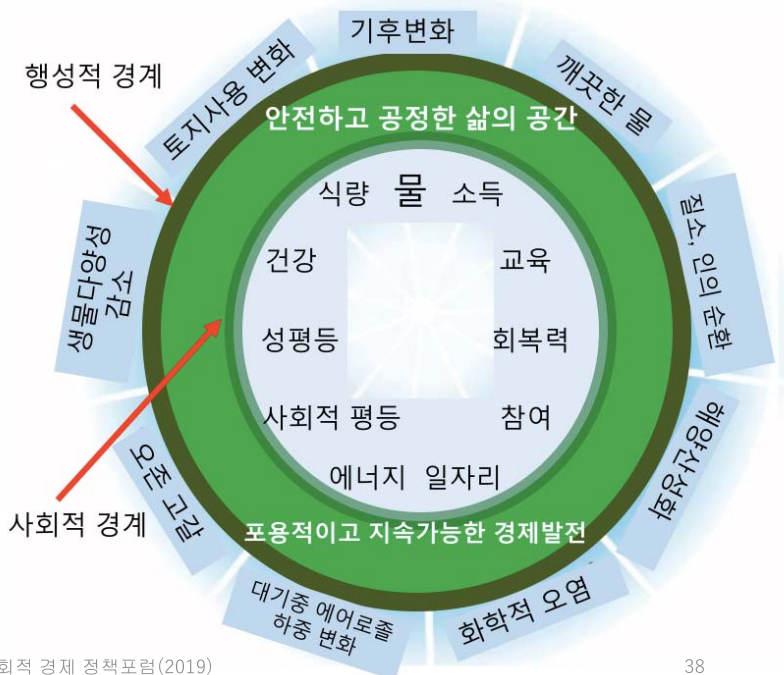
참고자료



제9회 사회적 경제 정책포럼(2019)

도넛 경제학에서의 두 경계 (행성한계와 사회적 한계)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란 도넛 모양의 안쪽 경계 즉 **사회적 기초(social foundation)**와 바깥쪽 경계, 즉 **환경적 천정(environmental ceiling)** 사이에서만 가능
- 이 영역에서 비로소 인류를 위한 안전하고 정의로운 경제가 실현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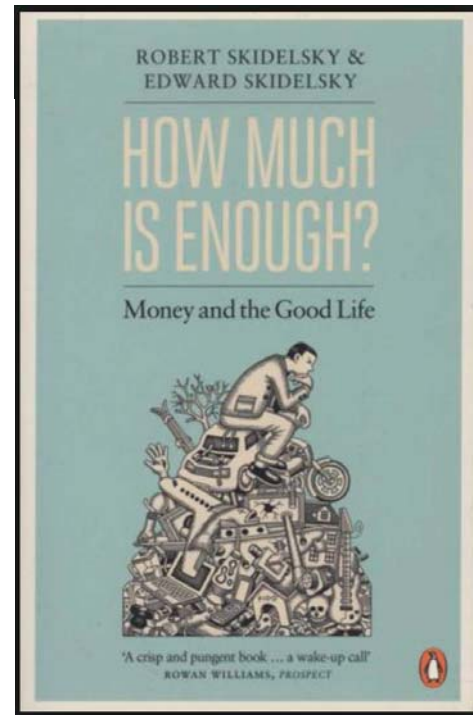


제9회 사회적 경제 정책포럼(2019)

주류경제학내에서의 인식 전환: 케인스의 재발견



제9회 사회적 경제 정책포럼(2019)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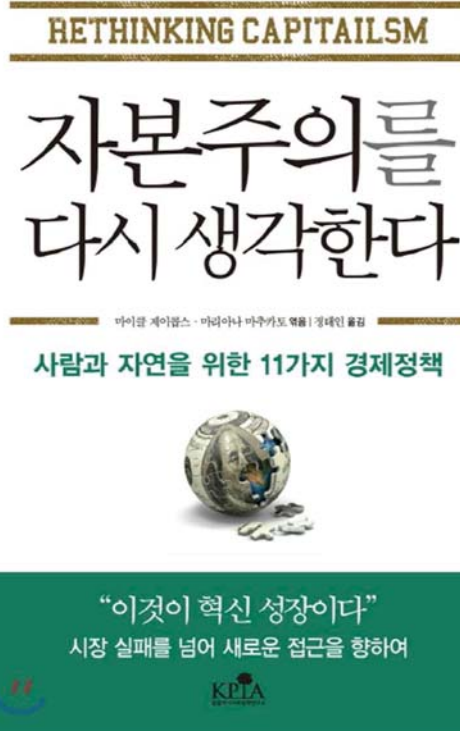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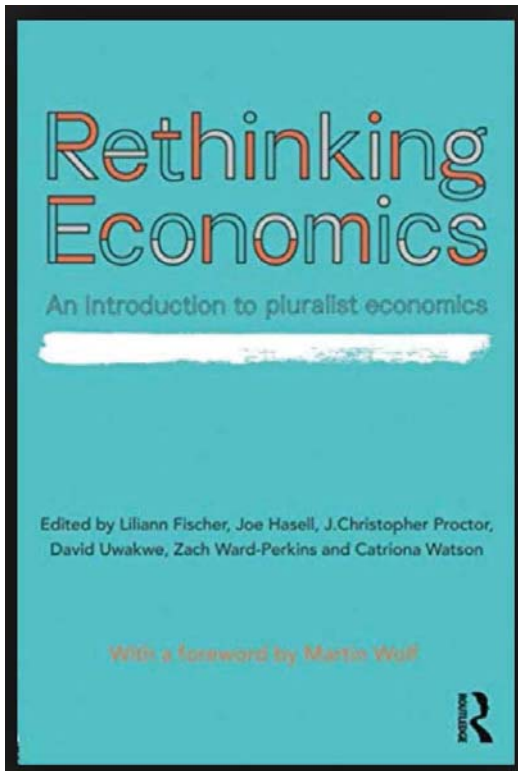
- “어려움은 새로운 사상에 있는 게 아니다. 어려움은 바로 우리 마음 속 깊숙히 뿌리 내리고 가치를 친 낡은 사상에 있다” (J. M. Keynes,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 1936)

- 30년에 걸쳐 완성한 케인스 3부작을 쓴 세계적인 케인스 연구자로 명성...영국 사민당 창당멤버 (1981년)... 1991년 상원의원으로 서품, 1994년 영국학술원 회원으로 선출 이 책은 평생을 케인즈의 일생을 해명하는 데 바친 노연구자가 만년에 철학자인 아들의 도움을 받아 케인즈를 대신해 그의 비전을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 제안하려는 시도 Robert Skidelsky, Edward Skidelsky, How Much is Enough? – The Economics of the Good Life, 2012. 김병화 역,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부키, 2013.

-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는 유토피아의 지향을 계승하되, 이제까지의 시도들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개인의 개성과 공민의 의무가 조화를 이루는 진정으로 좋은 사회를 실현하려는 ‘오래된 미래’의 기획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각자가 ‘자기만의 방’이나 ‘점포 뒷방’과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펼쳐가면서도 동시에 이웃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상대방의 좋음을 자신의 것으로 포용하며 우애를 나누는 자유인들의 연합체가 구현된다(박종현, 9)

제9회 사회적 경제 정책포럼(2019)

40



제9회 사회적 경제 정책포럼(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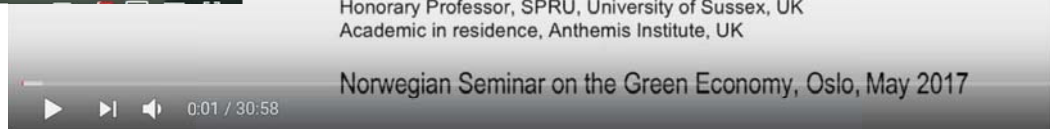
카로타 페레즈(Carlota Perez), Smart Green Growth



SMART GREEN GROWTH Innovation for the new 'good life' and a prosperous society

Carlota Perez
Visiting Professor, London School of Economics (LSE), UK
Professor of Technology and Development, Norkse Institute, Tallinn, Estonia
Honorary Professor, SPRU, University of Sussex, UK
Academic in residence, Anthesis Institute, UK

Norwegian Seminar on the Green Economy, Oslo, May 2017



제9회 사회적 경제 정책포럼(2019)

Smart Green Growth - Carlota Perez

- 녹색으로의 목표지향적 전환은 새로운 생활양식,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냄. 기존 포디즘이 대중들의 물질적 삶의 양식을 개선한 것처럼 스마트 그린 성장 시스템을 위한 녹색으로의 목표지향적 전환은 새로운 생활양식, 보다 행복한 삶(Green Good Life) 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임

- 유기농, 지역푸드, (유전자조작없는) 자연발생적인 것, 지속가능한 디자인, 자원재활용, 자전거타기와 카셰어링은 부유층이나 고학력 신세대층에 한정되지 않고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개인의 건강과 환경적 건전성에 시너지를 위한 변화이고 이러한 수요 측면에서의 지형변화는 첨단 정보통신기술 기반 위에서 전체 산업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변화로 이어질 것.

Ch.11. Capitalism, Technology and a Green Global Golden Age: The Role of History in Helping to Shape the Future)

마리애나 마쉴카토(Mariana Mazzucato), Green Innovation for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 혁신경제이론의 최고이론가로 평가받는 마리애나 마쉴카토(Mariana Mazzucato)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
- 혁신이 매우 경로의존적이기 때문.. **화석연료 기반 경제구조의 경로의존성과 잠김효과가 매우 강력하게 작동.** 경로의존성에서 이탈하려면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중요...**경로의존성은 또한 대단히 높은 이행비용을 요구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그 비용은 감소하게 됨.**
- 독일등 유럽에서의 1990년대 보조금 정책들의 사례를 보면,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고 시장이 확장되고 기술혁신이 일어나는 후속과정이 수반되면서 비용은 점차적으로 감소.. 2009-2015년.. 보조금도 축소... 북유럽에서 솔라패널은 이제 모든 가구에서 투자하는 일상적인 활동의 영역이 되고 로비단체들도 출현 (RETHINKING CAPITALISM Economics and Policy for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Path-dependent innovation
Strong policy
Positive feedback loops, a 'tipping point'
Self-reinforcing through new network effects



- **생태적 대안에는 경제(학)적 고려가 통합되어야 함.** 생태효율은 미래의 경제학이 되고 생태학적 고려는 경제의 장기 효율성을 뒷받침하게 됨 (Franz Alt, 1997. 박진희 옮김, 2004: 201). ‘**재생 에너지 프로그램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는 그것이 고용창출과 연결되는 것이 꼭 필요**’ (나오미 클라인)
- 제4차 산업혁명이 운위되고 ‘**노동의 종말**’과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현실도 전환을 위한 기회를 제공. 프란츠 알트가 강조한 대로 ‘**고용 없는 성장과 생태 위기는 우리가 조망할 수 있는 시간표 안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사회, 경제적 문제이고 동시에 함께 해결이 모색될 문제.** 독일의 경우 독일 연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독일 환경산업의 피고용자(135만명)는 이미 자동차산업의 피고용자(거의 100만명)보다 더 많음 (Franz Alt, 1997. 박진희 옮김, 2004: 15-18).

“에너지 전환, 이를 통한 지구 기후의 구원은 가능하다. (...) 태양 에너지 혁명은 21세기의 고용창출 정책을 위해서 현재의 자동차 산업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하다... 앞으로 **에너지의 전환만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Franz Alt, 1997. 박진희 옮김, 2004: 81-82).

“원전은 대안이 아니다. 독일의 환경 정책가 프란츠 알트의 말은 원전 불가피론에 대해 정곡을 찌르는 대답을 돌려주었다. “**전 지구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반대하는 사람은 원자력 이용을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곤 하는데 귀신을 쫓기 위해 귀신의 왕을 이용해서 막아내자는 말인가? 페스트를 반대하는 사람은 콜레라를 찬성해야 한다는 말인가?**” (Franz Alt, 1997. 박진희 옮김, 2004: 57).



4. 생태적 경제로의 전환과 사회적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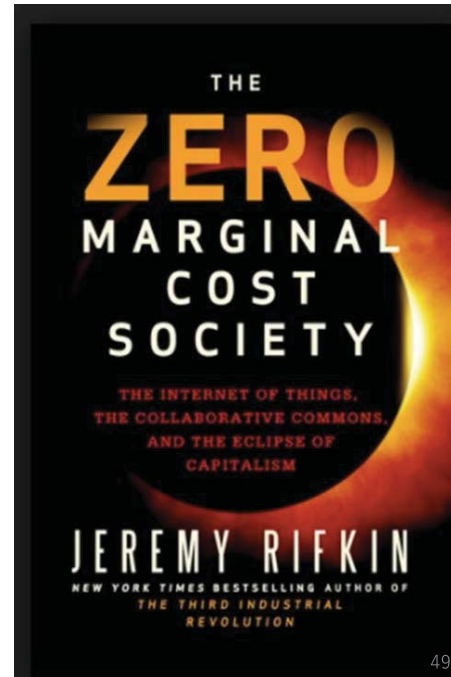
‘포스트 정상과학’의 시대, 뉴노멀 경제학 (New Normal Economics)의 핵심개념

- 핵심개념(key concepts)은 분권(decentralization), 분산(dispersion), 연결(networking), 참여(participation)
- 공통의 전략은 지역사회의 회복력 강화(community resilience)를 통한 화석연료 고갈, 기후변화, 경제위기에의 대응
- 주민소유 재생에너지 생산, 로컬푸드, 공유경제, 협동의 경제…
(Jerome R. Ravetz, 2006)

가능성: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 한계비용제로 사회

- 공유경제 확산과 확대의 기술적, 경제적 배경을 설명. 즉 현대 자본주의 발전의 성과로 만들어진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물류 인터넷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신경네트워크(global neural network created from the combined communications internet, energy internet and logistics internet)
- 거의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의 한계비용이 거의 0으로 수렴되게 함으로써 자유재(free goods)와 풍요로운 자원(제한된 자원이 아닌!)을 보편적인 상황을 만들면서 자본주의적 생산과 배분에서의 시장 영역과 이윤 창출 영역을 축소시키고 글로벌 공유자원(a global Collaborative Commons)의 영역을 급격히 확장시키게 될 것으로 예견 (Rifkin, Jeremy, 2014. 안진환 옮김, 2014)

제9회 사회적 경제 정책포럼(2019)



49

-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에너지 체계의 결합을 통해 ‘협력적 공유사회(Collaborative Commons)’라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대안으로 세계 무대에 등장했다고 선언
- 이윤 중심의 자본주의 경제와 구별되는 협력적 공유경제의 핵심 경제 단위로서 사회적경제의 구성요소들을 제시
- 그의 제3차 산업혁명 논의는 유행하는 ‘제4차 산업혁명’ 논의와 달리 경제 산업구조 재편과 고용 전략 수준에 머물지 않고 에너지 분산과 사회 권력의 분산이라는, 이중의 의미에서의 ‘파워 투 더 피플(power to the people)’에 대한 기획임을 강조.
- 지역과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보다 수평적이고 민주적으로 분권화된 ‘정치 시스템’과 보다 분산된 공동체,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가 지탱하는 ‘에너지 시스템’이 발전하게 된다는 것.

제9회 사회적 경제 정책포럼(2019)

50

사회적 경제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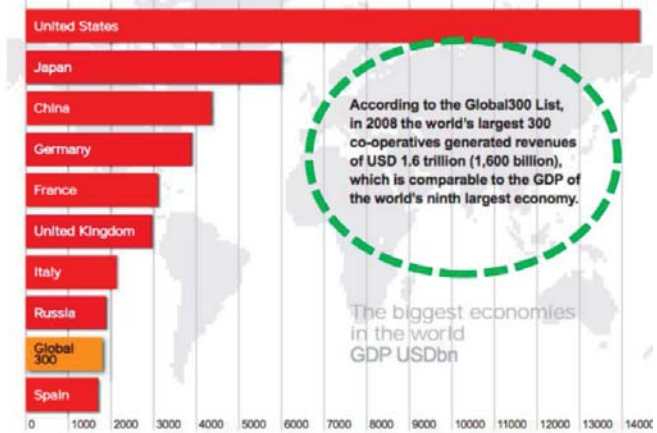
- ILO(국제노동기구)는 이미 10여 년 전, 사회적경제를 ‘생태적·사회적·공동체적 목표가 하나로 수렴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모델’로서의 가능성에 주목 (정건화, 2016). 또 UN은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

- 유럽과 북미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도처에서 사회적 경제 성장.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대규모 자원의 집중과 소비에 기반한 기존 경제 시스템과 다른 대안경제를 시도하는 **실험적 프로젝트**들이 다양하고 활발하게 출현

The world's 300 largest co-operatives

This is the fourth Global300 List identifying the largest co-operative/mutual enterprises in the world.

This year, we've adjusted our methodology to align it with other international lists. For example, we are using gross rather than net revenue for co-operative banks. As a result rankings with the Global300 list may vary significantly, mainly in the banking sector, from previous years.



제9회 사회적 경제 정책포럼(2019)

독일 에너지 전환의 중추(Backbone Network), 햇빛발전 협동조합의 성장과 독일의 첫번째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세나우 전력(Schönau Power Supply)

- 에너지 전환의 대표적 사례인 독일의 경우, 체르노빌 사고를 보고 충격을 받은 독일 남서부 슈바르트 발트(Schwarzwald, 흑림)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650명 주민들이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독점 공급하는 민간기업에 대항해서 시작한 재생에너지 사용 캠페인(1986년)이 그 첫걸음이었음.
- 그로부터 25년 후 독일에서는 **지역사회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에너지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결성되어 2011년 말까지 439개로 늘어남 (Davidson, Osha Gray., 2012).
-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성과로 독일에서는 **47%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시민들이나 협동조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 등으로 구성되는 재생전기의 65%는 개인이나 협동조합,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의 소유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므로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깨끗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아니라 **집중되고 기업이 지배하는 에너지 시스템으로부터 소규모 분산적이고 분권화된 사회로의 사회경제적 전환**(social-economic transition)이기도 함(Arne Jungiohann, 2017).



제9회 사회적 경제 정책포럼(2019)

〈표 12-1〉 한국의 생협 단체 현황

(단위: 개, 명, 억 원, %)

구분		아이쿱생협 사업연합회	한살림 생협연합회	두레 생협연합회	행복중심 생협연합회	합계
회원 조합수(개)	2012년	74	20	27	5	126
	2013년	77	21	28	10	136
성장률(%)		4.0	5.0	4.0	100.0	5.6
조합원 수(명)	2012년	170,127	346,500	127,380	27,159	671,116
	2013년	194,856	410,211	142,016	30,170	777,253
성장률(%)		14.5	18.4	11.5	11.1	15.8
매출 (억 원)	2012년	3,449	923	923	167	7,102
	2013년	4,279	1,015	1,015	170	8,570
성장률(%)		24.1	10.0	10.0	1.6	20.7

자료: 아이쿱 2014 GSFF 발표문

- 우리사회 **생협**의 **성장**은 안전한 먹거리, 도농 직거래, 학교급식, 소생산자 연합 등에서 이윤기업외에 **대안적 기업모델**이 발전가능함을 보여줌

- 2012년 1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전미 지구 물리학 연합회 (American Geophysical Union)의 가을 회의**에서 복잡계 시스템 연구자인 UC San Diego 대학 교수 Brad Werner는 자신이 사용한 다양한 고급 컴퓨터 모델을 통한 시뮬레이션 기법을 장황하게 설명.

- 그러나 결론은 '글로벌 자본주의는 전면적이고 거침없는 속도로 자원을 고갈시켜 지구-인류시스템을 위험하고 불안정 하게 만들 것'이라고 예측.

- 당시 한 기자가 단도직입적으로 해법은 없는가고 묻자 그는 '모델에서 유일하게 다소 희망적인 경로가 하나 있기는 하다'고 하면서 아주 명료한 말로 그 유일한 경로에 대해 설명. 그것은 '**저항(resistance)**'을 통한 '**전복적 경로**'였음.

- '주류문화의 바깥에서 환경위기에 대한 원주민, 노동자, 시민들에 의한 광범한 대중적 저항이라는 경로' (Naomi Klein, This Changes Everything, 2015, 773-776).

Welp, Earth Is Probably Fucked

Statistically speaking, that is, according to complex systems theorist and geophysicist Brad Werner.

SHARE F TWITTER



- 사회적 경제를 바탕으로 한 사회는 **소수 비주류 급진적 경제학자의 머리나 가슴 속에 간직된 이상으로만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님**. 특히 고용창출과 고령화 등에 대응하는 사회적 서비스 영역에서는 분명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생태적 전환을 위한 대안적 경제의 단위 요소들은 **당위와 윤리의 차원에서 이미 실행의 차원으로 내려와서 현실 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실험의 사례들과 성과를 축적하고 있음**.
- **‘협력적 공유사회’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일상 경제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대안적 경제의 다른 이름**... 주거, 돌봄, 재생에너지, 도시농업과 도농교류, 보육, 의료, 온라인 오픈 플랫폼과 쉐어웨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출현하고 성장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공유경제, 공동 부엌(communal kitchens), 지역 재단, 전환마을 등이 그 형태들. 여기에 사회적금융, 크라우드 펀딩, 지역화폐, 대안화폐, P2P 대출, 타임뱅크(Time Bank), 크레딧 유니온(credit union), 윤리적인 은행 등 새로운 금융 거래 형태들이 협력적 공유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임.

- 사회적 경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새로운 대안적 해법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새로운 대안적 경제시스템에 대한 **기대와 상상력에 기인**. **사회적 경제가 지닌 문제 해결능력, 공동체(community)의 복원과 지역재생, 그리고 공공성 존중과 민주주의 심화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의 역할에 주목하는 것**.
-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는 것은 사회적 경제가 지닌 다양한 **‘참여적 특성들’** 때문. 즉 거버넌스, 파트너십, 공동생산(co-production), 협력적 건설(co-construction), 네트워킹 등의 특성을 통해 한 사회는 노동, 돌봄, 보건 및 의료, 교육 및 문화, 주택, 환경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지속가능한 생활(sustainable livelihood)을 ‘지역(local)’이라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소가 통합되어 있는 공간에서 실현할 수 있기 때문.
-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대안이라기보다 **‘생산, 소비, 분배, 지역경제(고용)’에 관한 대안적 실천을 실험하는 새로운 실험의 장**.. ‘사회적 경제의 고유한 한계는 사회적 경제가 뿌리깊은 현재 시스템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점’ 그러나 **이러한 실험 실적 대안이 광범하게 된다면 자본주의를 변화시키고 공공영역에서 민주주의 심화가 가능하게 될 것**(Bouchard, Marie J. 2013, 274-275).



References

- 정건화 (2018). 생태문명으로의 전환과 사회적 경제, 생협평론 제31호.
- 정건화 (2016). 한국경제와 사회적 경제,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불화와 공존 (공저).
- Bouchard, Marie J. (2013). Innovation and the Social Economy: The Quebec Experience. University of Toronto Press (Kindle Edition)
- Hazel Henderson, Creating Alternative Futures- The End of Economics, 1977.
- ILO, 2010. Global Jobs Pact Policy Briefs, No.10., 2010, The Resilience of Social and Solidarity Enterprises : the Example of Cooperatives.
- Jung, Gunna. (2017). What Can Economics Do for Ecological Civilization?, Eco.Civ Korea Conference 2017 (Green Transition Toward Ecological Civilization: A Korea- US Dialogue).
- Raworth, Kate. (2017). "Doughnut Economics: Seven Ways to Think Like a 21st-Century Economist", Chelsea Green Publishing (iBooks)
- Klein, Naomi. (2014). "This Changes Everything: Capitalism v.s The Climate." Simon & Schuster, Inc. (iBooks).
- Liliann Fischer, Joe Hasell, J.Christopher Proctor, David Uwakwe, Zach Ward-Perkins, Catriona Watson , Rethinking Economics An Introduction to Pluralist Economics, Routledge, 2018 (iBook)
- Michael Jacobs and Mariana Mazzucato, RETHINKING CAPITALISM Economics and Policy for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Edited by, 2016 The Political Quarterly Publishing
- Rifkin, Jeremy. (2014) "The Zero Marginal Cost Society: The Internet of Things, the Collaborative Commons, and the Eclipse of Capitalism".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2016). Green is Gold, The Strategy and actions of China's Ecological Civilization.
- Whitehead. A. North. (1933). "Adventures of Ideas", Cambridge University Press.

발제1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현황과 전망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자원순환사회적경제연구소 소장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현황과 전망

2019.4.1

홍수열 /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1.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개념 및 범주

- 사회적경제의 개념은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는 어려우나 사회적경제가 갖추어야 할 가치 및 운영 원칙의 측면에서 대체로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음

사적 이익추구를 우선으로 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추구를 우선하면서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민주적 운영
(직장민주주의)



사회적 약자보호
(시장경쟁에서 탈락하는 약자보호)



지역 및 공동체와의 협력과 연대
(풀뿌리에 기반한 다양한 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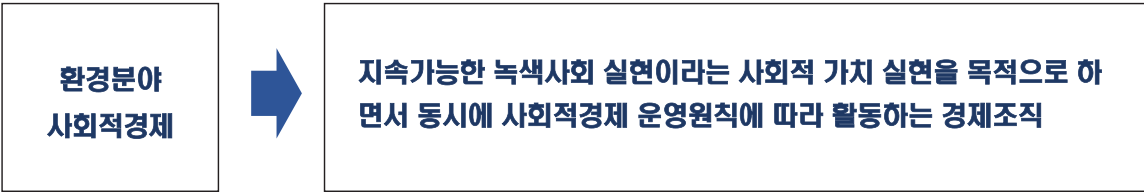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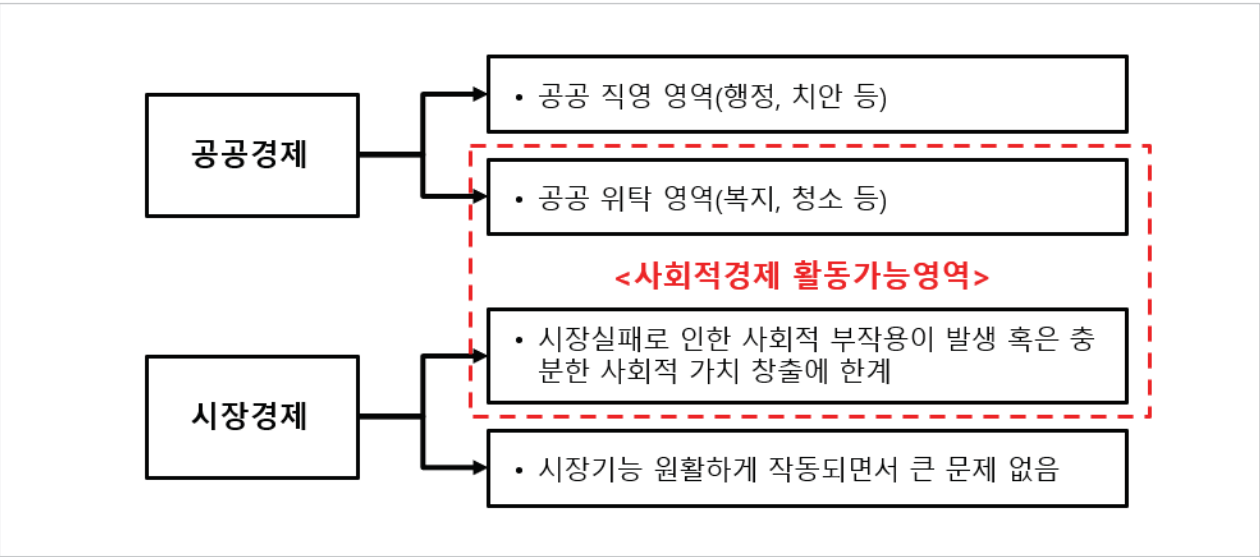
1.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개념 및 범주

▪ 환경분야 사회적경제란 환경적 가치 혹은 목적실현을 위해 활동하면서 동시에 사회적경제 운영원칙에 부합하는 경제조직으로 정의할 수 있음

⇒ 환경관련 기업의 경제활동 또한 국내외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환경분야 사회적경제는 환경가치추구의 적극성(이익극대화가 아니라 환경가치실현 극대화를 위해서 이익배분 및 재투자)과 조직운영의 민주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구분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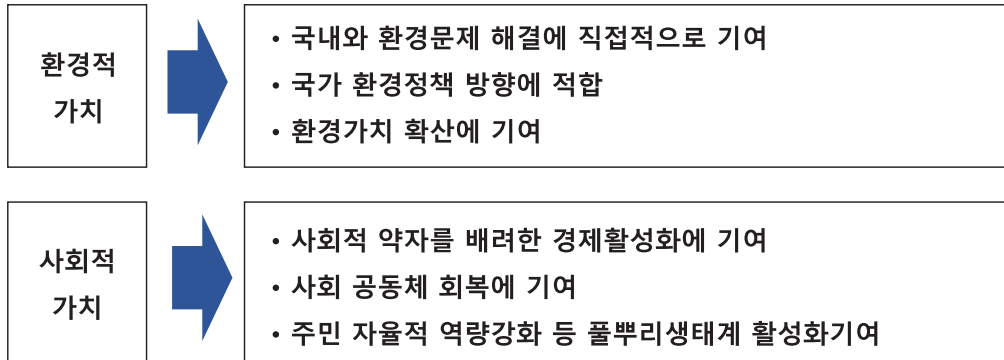


1.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개념 및 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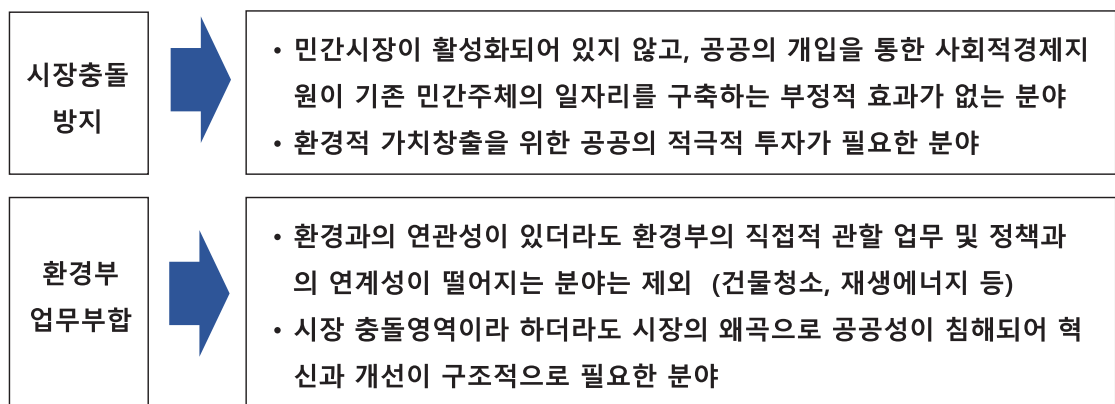
1.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개념 및 범주

-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상선정 원칙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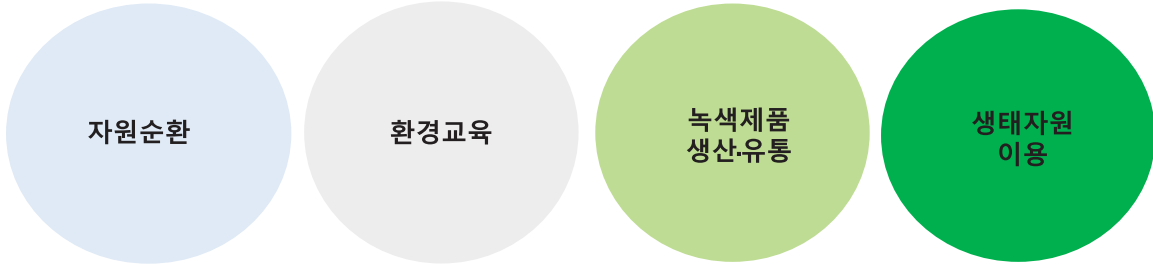
1.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개념 및 범주

-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상선정 원칙은 다음과 같음



1.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개념 및 범주

■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영역 및 유형은 다음과 같음



✓ 현재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동이 이뤄지고 있거나 모색되고 있으며,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선정원칙에 부합하는 분야는 크게 네가지 분야 (자원순환에서 업사이클을 분리할 경우 다섯가지 분야)

1.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개념 및 범주

■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영역 및 유형은 다음과 같음

분야	유형	가능성
자원순환	재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재활용센터설치는 지자체 의무이지만 미설치된 경우가 많고, 지자체의 적극적 투자가 미진하기 때문에 공공재활용센터 운영분야 가능성 있음 • 의류 등 재사용가게는 아름다운 가게, 되살림사회적협동조합 등 사례 있음
	업사이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가공, 업사이클 제품 생산 및 유통관련 사회적경제 가능 (지자체 지원과 연계)하며, 사회적 기업 등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음
	수집운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위탁업무 영역에서 사회적경제 가능함. 성남시, 화성시(동탄신도시) 등 사례가 이미 있음
	선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공공선별장 위탁운영업체 선정 시 사회적기업 혹은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가능성 있음 • 민간선별시장의 경우 기존 기업과의 충돌가능성 있음

1.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개념 및 범주

▪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영역 및 유형은 다음과 같음

분야	유형	가능성
자원순환	재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활용시장은 완전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기존 시장과의 충돌의 가능성 있으나, 사회적경제 사례가 있음 SR센터와 같이 중소형 전기전자폐기물 재활용 분야의 경우 지자체 공공투자가 필요함 음식물쓰레기 발생원 자원화와 도시농업과의 연계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가능성 있음
환경교육	공공지원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에 의한 환경교육 영역은 이미 비영리전 문단체에 의한 교육이 되고 있음 환경교육전문기관이 사회적경제 주체가 되는 것은 가능성 있음
	민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버려진 장난감을 활용한 환경교육 '쓸모' 사례와 같이 민간교육 시장에서 경쟁하며 사회적경제 영역을 확대하는 것도 가능함

1.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개념 및 범주

▪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영역 및 유형은 다음과 같음

분야	유형	가능성
녹색제품 생산유통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시장의 기존 업체의 충돌가능성이 있으나 민간의 자발적인 사회적경제 형성 가능성 있으며 사례가 있음 제조시설 설치의 경우 이익의 재투자 등의 문제로 사회적경제로 전환하는 유인이 크지 않음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녹색제품의 유통 및 판매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있으며, 실제 사례도 있음 중소기업 기반의 녹색제품 생산 및 유통생태계가 활성화, 민간소비 활성화 관점에서 기존 시장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필요함
생태자원 이용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마을기업 등의 형태로 지역의 생태자원을 이용한 체험관광 등의 사업 가능함

2.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현황 및 전망

- 2018년 12월 기준으로 사회적경제 조직 중 환경분야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은 약 480여곳으로 잠정 집계되지만, 누락, 활동변경 및 활동내용 분류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정확한 수는 파악하기 어려움

구분	전체현황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2,154 (2019.3기준)	208
예비사회적기업	25,000 (2019.2기준)	
(사회적)협동조합	14,990 (2019.3기준)	175
마을기업	1,514 (2018.3기준)	81
자활기업	1,214 (2018.12기준)	54
(중복)	-	43

2.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현황 및 전망

- 환경분야 사업내용은 자원순환(재사용, 재활용, 수집운반 등) >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 > 환경교육 > 업사이클 > 생태관광의 순으로 나타남

⇒ 녹색제품은 녹색제품인증(환경마크, GR마크)을 받은 제품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친환경 비누, 세제, 물품 등을 포괄하는 것임

⇒ 재활용품 수집 및 선별, 재사용 가게(수리 포함), 폐기물 수집운반 등 자원순환 분야가 환경분야 사회적경제에서 압도적 다수로 나타나고 있음 - 시장진입이 상대적으로 쉽고, 수익모델 창출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환경교육의 경우 환경교육만 전문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업사이클, 녹색제품 판매 등과 병행하면서 할 수 있음

2.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현황 및 전망

<재사용 분야>

- 취급물품 (가구 및 대형가전 전문 매장, 의류 및 잡화, 소형 생활용품 전문, 장난감, 자전거, 스포츠용품, 악기 등 특정품목 전문매장), 조직유형(복지, 마을재생, 교환운동, 기부가치확산, 영리지향 등) 등에 따라 사회적경제 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재사용 매장 혹은 기업이 있음
-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중고물품전문 매장이 다수 있으며, 사회적경제 내에서도 아름다운 가게 등 비즈 니스모델을 확립하고 성공한 모델이 있음
- 전세계적인 쓰레기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재사용에 대한 관심 및 규제가 선진국에서는 강화(수리권보장 운동 등)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광역 및 마을단위 리엔업 플라자 조성 등 재사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할 계획

2.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현황 및 전망

<재사용 분야>

- 취급물품 (가구 및 대형가전 전문 매장, 의류 및 잡화, 소형 생활용품 전문, 장난감, 자전거, 스포츠용품, 악기 등 특정품목 전문매장), 조직유형(복지, 마을재생, 교환운동, 기부가치확산, 영리지향 등) 등에 따라 사회적경제 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재사용 매장 혹은 기업이 있음
- 기부에 의존하는 재사용 매장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는 판매가치가 없는 물품의 비율이 전체 기부품 중 60~70%에 달하고 있어 폐기물품의 처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소규모 재사용매장일수록 물품의 기부인프라가 취약하여 매장에 판매할 물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인력의 전문성(중고물품의 매입가격 및 판매가격 설정, 선별)과 안정적인 공간 확보(임대료 부담경감)도 재사용매장운영의 어려움으로 거론되고 있음

2.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현황 및 전망

<재사용 분야>

- 중고물품을 재사용 가게에 기부하는 비율이 수도권 기준 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사용 시장의 잠재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재사용 매장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 동네단위 재사용 매장 확대를 위해서는 가정 및 기업으로부터 기부물품을 모아서 선별 후 매장에 제공하는 공공플랫폼 운영, 공공건물을 활용한 재사용 매장 제공, 운영매뉴얼 지원 등이 필요함

2.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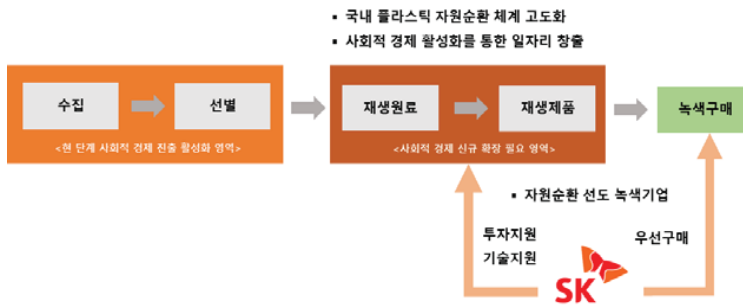
<재활용 분야>

- 지자체가 직영 혹은 위탁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영역의 경우 위탁업체 선정 시 사회적경제 조직에게 위탁하는 방법이 있으나, 기존 민간수집운반업체와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함
⇒ 신도시 지역 등 기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없는 지역의 경우 지자체에서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위탁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함. 다만 위탁조건 관련 검토가 필요함
- 재활용품 선별 및 재생원료 영역은 민간시장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지자체 공공선별장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이 위탁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신규로 설치되는 공공선별장의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 필요

2.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현황 및 전망

<재활용 분야>

- 재활용품 선별장 ⇒ 재생원료 생산업체 ⇒ 대기업 구매로 이어지는 재활용생태계 구성도 논의필요



2.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현황 및 전망

<업사이클링 분야>

- 업사이클링 분야는 업사이클링 소재조달 및 가공, 업사이클링 제품생산, 업사이클링 판매로 구분되지만, 현재 전문화되어 있지는 않음
⇒ 현재 활동중인 업사이클링 업체 중 업사이클 제품생산만으로 유지되는 기업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업사이클링 교육 등 프로젝트를 병행하고 있음
- 업사이클링 판매는 재사용 매장 및 녹색제품 유통과 연계하여 판로를 확대 및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제품의 특성에 따라 독자적인 판로개척이 필요할 수 있음
- 소재조달 및 가공은 공공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며, 소재전문 사회적경제조직 필요
⇒ 소재전문 사회적경제조직은 업사이클 제품생산이 활성화되어야 함. 가능성 있는 스타 업사이클 기업 필요

2.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현황 및 전망

<환경교육>

- 환경교육은 주제별로는 숲교육에 편중 (전체 환경교육의 80%)되어 있으며, 비영리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은 대부분 정부 및 지자체, 기업의 사회공헌기금에 의존하고 있음
- 일부 부유층 지역 중심으로 고급 민간 환경교육(숲체험)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 교육참가자들이 비용을 스스로 지불하고 참가할 수 있는 양질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기관의 환경교육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교재 및 교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 장난감학교 "쓸모"의 경우 버려진 장난감을 교구로 활용하여 아이들 스스로 장난감 등을 다시 만들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외부지원없이 교육참가비만으로 운영하고 있음
 - ⇒ 교육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필요

2.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현황 및 전망

<녹색제품>

- 중소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 인증제품을 공공기관 및 민간에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이 경기도 지역에 권역별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음
-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학교 및 유치원 등에 녹색제품 구매 기관으로 인증하는 사업 등이 결합될 경우 녹색제품 유통분야 성장가능
-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의 시기별 특징이 있어 공공기관 구매가 없는 특정시기를 대비한 운영자금 지원 및 녹색제품 전문 유통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공공기관 홍보지원 등이 필요

발제2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가능성과 과제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과제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
(주)트래블러스맵 대표이사
변형석



사단
법인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Korea Central Council of Social Enterprise

“태평양 쓰레기섬의 쓰레기를 없애는 사회적기업은 없을까?”

Pacific plastic dump far larger than feared: study

March 22, 2018 by Patrick Galey And Marlowe Hood



Eight million tonnes of plastics enter the oceans every year, much of which has accumulated in five giant garbage patches around the planet, according to a new study

“태평양을 부유중인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는 이제 프랑스, 독일, 스페인을 합친 크기보다 - 예전에 염려했던 것보다 훨씬 - 커졌고 또 더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출처 :

<https://phys.org/news/2018-03-pacific-plastic-dump-larger.html#jCp>

“태평양 쓰레기섬의 쓰레기를 없애는 사회적기업은 없을까?” - <Boyan Slat>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지만
방대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필요한 비용·시간 때문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 와중에 네덜란드의 19세 청년 ‘보얀 슬랫’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입니다



5 / 11 사진 boyanslat.com



이 장치를 이용하면 10년 이내에
태평양 쓰레기 섬의 절반을 청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비용이 기존방식보다
33배 저렴할 뿐더러
속도도 무려 7900배 빠르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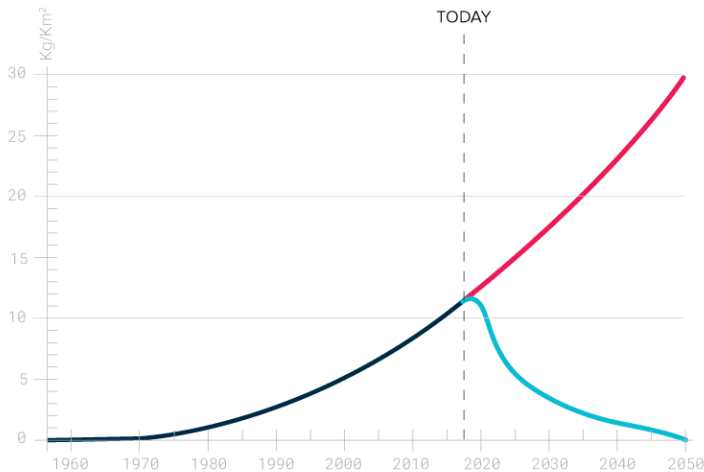
출처: <https://www.mk.co.kr/news/view/society/2016/05/372980/>

“태평양 쓰레기섬의 쓰레기를 없애는 사회적기업은 없을까?” - 2019, <The OCEAN CLEANUP>




출처 : 오션클린업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태평양 쓰레기섬의 쓰레기를 없애는 사회적기업은 없을까?” - <The OCEAN CLEANUP>



핵심기술 개발 / 크라우드 펀딩

시제품 제작(현재)

스케일업(2020)

수거 -> 판매

5년내 태평양 쓰레기 50% 수거

환경분야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미션

- 미세먼지(대기오염물)를 없앤다
-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인다
- 자원의 재활용율을 높인다 / 자원의 소비량을 줄인다
-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인다 /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한다
-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존한다
- 생태계를 보호한다
- 인체 및 자연환경에 무해한 제품을 생산한다
- 생태주의적 삶을 실천한다
- 물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

사회적기업에서의 환경 분야 분류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정의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수행 하는 사회적기업”

대분류

환경관리/자원순환, 녹색서비스, 기후변화 대응, 지역/공간/커뮤니티

중분류

- 환경관리/보건, 환경복원, 녹색제품
- 교육/체험, 연구개발, 컨설팅, 녹색유통/금융
-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서비스,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
- 자연생태 보전, 녹색 건축, 공동체, 유기농/친환경식품

- 출처 : 2011,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 환경부

사회적기업에서의 환경 분야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세부항목)	비고
환경관리/ 자원순환	환경관리/보건	청소, 수거, 위생, 오염처리, 환경관리 및 측정	환경부
	환경복원	재이용, 재활용, 재제조, 정화처리	환경부
	녹색제품	상품생산, 녹색구매 및 판매	환경부
녹색서비스	교육/체험	환경(녹색, 생태) 교육, 체험 및 관광	환경부
	연구개발	기술개발, 장비 및 설비개발, 녹색경영	환경부
	컨설팅	컨설팅(상담지원), 환경진단, 에너지진단	환경부
	녹색유통/금융	유통, 물류, 수송, 지역화폐(금융)	환경부, 지경부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생산/공급서비스	풍력,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수력, 바이오에너지	지경부, 환경부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	단열, 절수, 절감, 에너지절약 시공	지경부, 환경부
지역/공간/ 커뮤니티	자연생태보전	감시, 보전, 관리	환경부, 산림청
	녹색건축	보수 및 수리, 개조, 장비 및 시설임대	환경부, 국해부
	공동체	주민참여 및 협력	행안부
	유기농/친환경식품	재배, 가공 및 제조, 판매	농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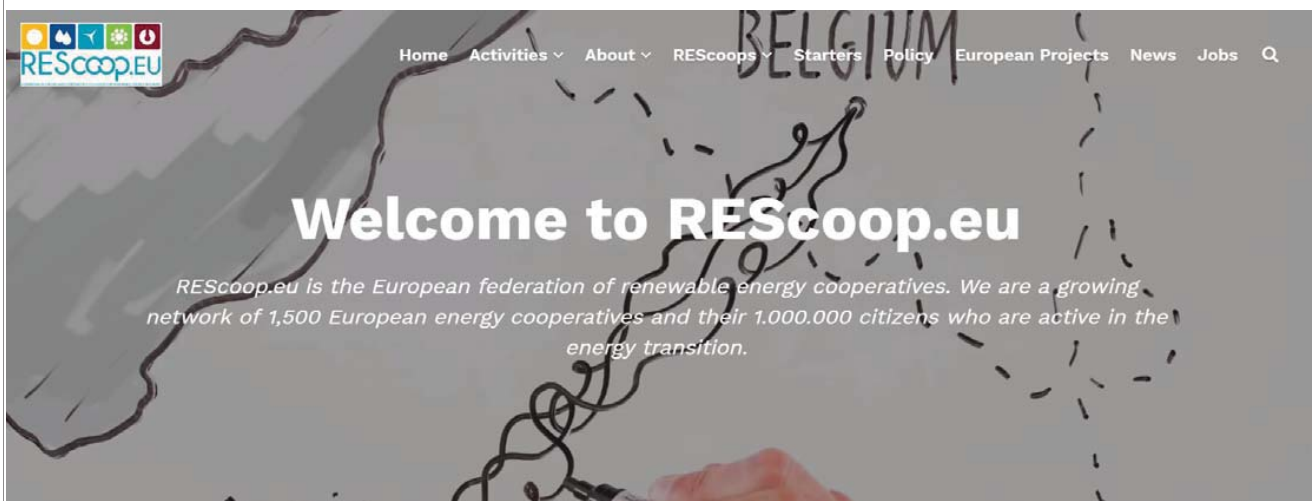
해외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사례 - 프라이탁



출처 : 프라이탁 공식 홈페이지

- 연간 300,000만개의 가방 판매, 직원 150명, 연매출 500억원
- 연간 트럭 천막 200톤, 자전거 튜브 7만5천개, 안전벨트 2만5천개 업사이클
- 반드시 5년 이상 사용한 방수천만 사용, 공장 운영에도 친환경 정책 적용
- 터치포굿, 모어댄, 이스트인디고 등 국내 사례도 다수 등장

해외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사례 - REScoop



- REScoop : Renewable Energy Cooperatives
- 1,500여개의 유럽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연합체. 합계 1백만 조합원.
- 전기 생산과 유통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권리, 에너지 민주주의, 에너지 사용 효율화 캠페인 등 정책적/법적 영향력을 행사

자연환경의 보존과 현명한 이용 - 코스타리카



- 코스타리카는 1985년부터 생태관광을 국가정책으로 추진 중
- 전 국토의 27%가 보존지역으로, 2011년 UN 환경 지속성 평가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5개 기준을 모두 충족
- 생태관광은 일반적인 패키지투어 대비 5배의 지역경제 활성화효과가 있음
- 리우+20 지속가능발전회의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에 대한 10개년 계획>의 다섯가지 주요사업 중 하나가 생태관광-지속가능한 관광

Certification for Sustainable Tourism

- 코스타리카의 지속가능한 관광 인증제
- 총 5개의 등급으로 관광사업체를 인증하고 인센티브 부여
- 관광객, 사회경제환경, 관광 인프라, 물리/생물학 등 4개 측면에서 평가
- 세부기준으로 화학물질 사용 정도 / 물과 에너지 자원 관리 / 교육 및 훈련 / 재활용 시스템 / 지역 전통음식 제공 / 윤리 강령 / 최저임금과 사회보장 총 24개 기준 적용
- 대규모 리조트부터 지역 사회의 작은 사업자까지 800여개 인증



제주 선홍리 마을기반 생태관광 사례 - 역사

2007	세계자연유산마을, 환경친화생태마을 지정
2008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정
2010	환경부습지보호지역 지정, 자연생태우수마을 재지정
2011	람사르습지 지정
2012	환경부 생태관광지시범사업대상지 지정, 국가지질공원명소 지정, 세계자연유산 마을 권역종합정비사업
2013	람사르 시범 마을 지정, 환경부생태관광지 인증
2014	환경부 생태관광 성공모델 협약식, 세계 지질공원명소 지정



출처 : 제주레저신문



제주 선흘리 마을기반 생태관광 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



< 선흘리 주민해설사 >

- 선흘리는 세계적 희귀 습지로 손꼽히는 ‘곶자왈’을 품고 있는 마을
- 각종 보호지역 지정을 계기로,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로 부상
- 특히 지역민 주도의 협의 및 운영으로 민간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발돋움
- 2018년 4월, <선흘곶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며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선흘리 생태관광 활성화의 다섯 가지 요소

- 리더와 주민협의체의 역할
- 주민조직의 공동체기반 활동
- 자원의 관리와 보전
- 생태관광 프로그램
- 이익분배의 형평성

출처 : 2016, 박세진, < 공동체기반 생태관광마을 조성과정에서 나타나는 활성화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 선흘리 람사르시범마을을 중심으로 >

한국적 맥락에서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확산 가능성

환경관리 자원순환

-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이 포진
- 지자체/정부 등과 활발하게 협력사업 진행 중
- 수도권 쓰레기 대란 등의 사례에 비추어 사업 확대 필요성 절실
- 규모의 영세성, 비전문성 등을 뛰어넘는 사업화 전략 필요

업사이클링

- 사회적기업 아이템 중 가장 청년 친화적인 업종으로
- 업사이클링을 사업기반으로 한 다양한 청년 사회적기업이 등장
- 그러나 다수는 수공업기반, 디자인 퀄리티 문제 등으로 성장한계
- 더 많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적 인프라 절실

생태관광

-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민간주도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 생태자원의 보호와 통제에서 주민 관리체제로의 전환 필요
- 정부의 지원체계를 통한 생태관광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필요
- 생태 교육, 시민 참여, 소득 창출, 자원 보존 등의 복합적 전략임

에너지

- 햇빛발전협동조합 등 민간의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
- 그러나 자본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한계
-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확대를 시민에 의한 에너지 민주주의 구현의 기회로 활용

감사합니다



발제3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법·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지현영

환경재단 아시아환경센터 국장 겸 변호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경제 법·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지현영 환경재단 아시아환경센터&어린이환경센터 국장/변호사



사회적 경제의 연혁

-사회적경제는 시장 실패, 정부 실패,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경제 체제로, 우리나라에서는 IMF 이후 높아진 실업률과 사회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본격 확산됐다.

-2011년 2월 16개 광역자치단체, 11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사회적 기업의 발굴과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하여 운영중임.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현재 등록된 협동조합 수는 1만5000여 개에 이른다.

사회적 기업과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정의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말함(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부처형)의 요건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 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합니다.

◇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비교

▣ 기준법령

-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지정되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 받음.

▣ 사회적기업 인증에는 필요하나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에는 요구되지 않는 사항

- 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가 필요
- ②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 공통적인 요구사항

- ① 법인, 회사, 생활협동조합 등과 같은 조직형태
-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③ 사회적 목적 실현을 목적으로 할 것
- ④ 조직 형태가 회사인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할 것

● 인증(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정제) 및 지원제도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규칙
인증 요건	1. 조직형태: 정관·규약을 갖춘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비영리민간단체 2.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매출액 대비 노무비 30% 이상 3.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SE제공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 및 SE취약계층 고용을 30% 이상 (13년말 이후 50% 이상), 혼합형·지역형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률 20% 이상 4. 서비스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 5. (상법상 회사) 이윤 2/3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고용을 통한 영업활동 수행 (매출규모 무관) 3.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4. (상법상회사의 경우)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지원	① 경영컨설팅 ② 공공기관 우선구매 ③ 시설비 등 지원 ④ 세제 지원 ⑤ 사회보험료 지원 ⑥ 전문인력 채용 지원 ⑦ 인건비 지원 ⑧ 사업개발비 지원 ⑨ 모태펀드	① 경영컨설팅 ② 우선구매(공공기관별 상이) ③ 인건비 지원 ④ 사업개발비 지원 ⑤ 모태펀드

사회적 기업의 종류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18.12.31.까지는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18.12.31.까지는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㉞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㉟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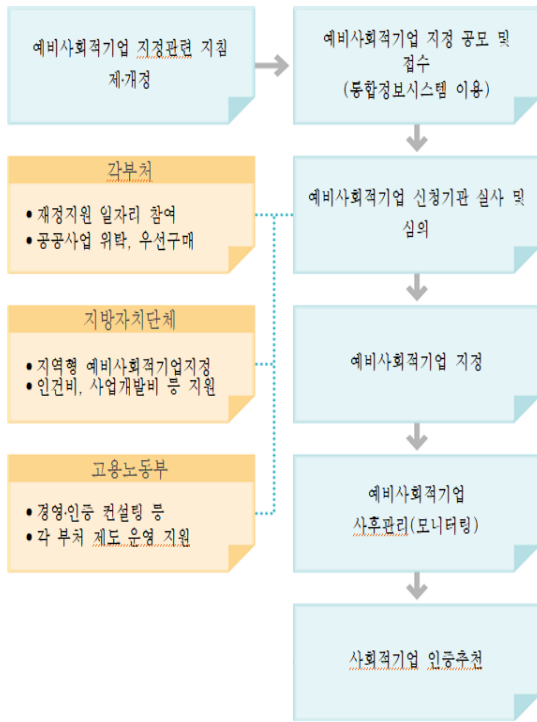
㊱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18.12.31.까지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상일 것

● **기타형** :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적이거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정책심의회 심의, 고용노동부 결정)

⑥ 추진체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센티브

☞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

☞ 인증 추천(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한 기업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인증 추천받은 기업에 대한 특례

☐ (추천기관의 현장실사 동행)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환경부장관의 인증추천을 받은 기관에 대한 현장실사에 인증 추천한 환경부 소속공무원이 동행하도록 할 수 있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현장실사 일정을 사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주어야 함

☐ (인증요건 판단의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심사 시 일부 인증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환경부장관의 인증추천을 받은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할 수 있음

예) 일자리제공형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사회적 실현'을 요구하고 있으나 인증 추천받은 기업은 완화하여 적용 등

- 특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

☞ 상시·집중 컨설팅 서비스 제공, 자원 연계 등

2019년 3월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 19.3월까지 62차에 걸쳐 총 2,524개 인증, 현재 2,154개소 활동 중

(단위 : 개소)

연도	신청	인증	현재 유지
계	4,049	2,524	2,154
'07	166	55	36
'08	285	166	111
'09	199	77	58
'10	408	216	146
'11	224	155	113
'12	317	142	122
'13	469	269	213
'14	481	265	223
'15	427	295	263
'16	326	265	254
'17	306	256	253
'18	372	312	311
'19	69	51	51

○ 지역별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새증
400	103	71	130	104	64	77	356	120	93	93	129	112	142	99	50	11
(18.6%)	(4.8%)	(3.3%)	(6.0%)	(4.8%)	(3.0%)	(3.6%)	(16.5%)	(5.6%)	(4.3%)	(4.3%)	(6.0%)	(5.2%)	(6.6%)	(4.6%)	(2.3%)	(0.5%)

○ 설립경로별 현황*

[예비]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장애인 직업장	농어촌 공동체회사	(사회적) 협동조합	기타
1,407	181	44	163	9	258	483

* 설립경로 중복포함

○ 조직형태별 현황

비영리 (532)					영리 (1,622)			
민법상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 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기타법인 및 단체	상법상 회사	농(어)업 회사법인	영농(어) 조합법인	협동 조합
267	85	75	102	3	1,300	74	92	156
(12.4%)	(3.9%)	(3.5%)	(4.7%)	(0.1%)	(60.4%)	(3.4%)	(4.3%)	(7.3%)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별 현황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창의·혁신형
1,442(66.9%)	133(6.2%)	128(5.9%)	191(8.9%)	260(12.1%)

○ 서비스 분야별 현황

문화 예술	청소년	교육	사회복지	환경	간병·가사지원	관광 운동	보건	보육	신원보 전 및 관리	문화재	고용	기타
248	203	190	114	113	97	49	16	15	10	9	8	1,082
(11.5%)	(9.4%)	(8.8%)	(5.3%)	(5.2%)	(4.5%)	(2.3%)	(0.7%)	(0.7%)	(0.5%)	(0.4%)	(0.4%)	(50.2%)

[환경/청소 서비스 분야] : 316개

일자리제공형 272개

창의·혁신형 26개

혼합형 13개

지역사회공헌형 5개

사회서비스제공형 0개

영국

- (노동통합과 일자리 창출의 수단보다는)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 혁신과 공동체적 기업원리의 전파를 위한 차별적 모델을 형성하기 위한 취지로 발전
- 규율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이 회사법, 산업공제조합법, 자선단체법 등의 적용을 받다가 2005년 7월, 공동체 이익 회사 규정(Community Interest Company Regulation)을 별도로 제정(이중구조 취하는 것 가능)
- 공동체이익회사 규정에 의해 사회적 목적에 기업가적 정신을 결합시켜 당면한 공공사회서비스와 지역사회 개발의 파트너로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면서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 조직들, 특히 보증유한책임회사나 I&PS로서의 지위를 갖기 어려운 보다 비공식적인 조직들에게 상법상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 .
- CIC법은 기존의 제3섹터의 다양한 조직들이 공동체이익회사 테스트를 통과하면 CIC로 등록을 허용, 명칭의 사용을 독점하지 않음.

(영국 회사법은 CIC를 “공익을 위해 이익과 자산을 사용하려 하는 사회적기업들을 위해 만든 새로운 유형의 회사로 유연하고 안정적인 기업형태이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특별한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설립이 용이한 기업”이라고 정의)

- 면세혜택과 우선구매제도가 없으며 공공시장이나 민간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기 때문에, 중간지원 조직을 발달시키고 필요한 금융지원제도를 활성화.
- 통상산업부 내 사회적기업청에서 관할하다가, 2006년 총리실 소속 장관급의 제3섹터청을 설치하여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전국연합, 공동체이익회사협회 등 민간부문의 대표기구가 정부 파트너로서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런던, 소셜벤처파트너스 등 다양한 중간지원기관을 육성하고 이를 매개로 다양한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육성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

미국

- 정의 : 기업적 방법을 사용하여 주요목표인 사회적 혹은 환경적 미션을 이행하는 조직 또는 사업
- 정부는 직접적 지원은 두지 않고 세제상에서 면세혜택 등 간접적 지원 방식을 채택
- 민간 재단이나 시장원리에 따른 사회적 금융지원체계가 발달되어 있음.
- 육성주체가 정부 차원이 아님. 자선재단이 중요한 투자기관으로서 사회문제해결에 기업적 방식을 원용하여 비영리부문의 혁신과 경쟁력,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정부 차원의 특별한 규제가 없어 유형이 다양하고 비영리적 목적사업에 필요한 수익창출을 위해 시장원리에 기반한 기업적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음 -> 유럽방식보다 지속가능성, 수익성, 경쟁력이 높음
- 1)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한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지원
(예컨대, 사회적기업과 개발도상국에서의 비정부기구활동을 연계하는 잠재력 강화)
- 2) 직원소유제도(ESOP)제도에 대한 정부 지원
- 3) 지역사회채투자법을 통해 다양한 CDFI(지역공동체개발금융기구) 발달
- 4) 대학, 고등교육기관의 리더십 함양 및 네트워크 강화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사회적 기업 등록제 전환

1. 그간의 경과

- 사회적 목적 실현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고 **재정·세제** 등 집중 지원하여 **적극 육성**, 10여 년간 성장기반을 다짐
 - * '07년 55개소 2,539명 고용 → '18년 2,122개소 45,522명 고용(취약 27,589명)
 - * '17년 총 매출액 3,355,530억, 영업이익 발생기업 1,008개소, 월평균임금 162만원
- '07년 법 제정 당시 바로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가운데, '10년대 들어 인증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취지의 **등록제로의 전환 요구**가 더욱 확산·증대
 - 인증요건이 지원과 연계됨에 따라 **까다롭고**(지속가능성 중심 판단),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지 못한다**(일자리제공형 약 70%)는 문제제기
 - * "인증제가 창의적인 사회적기업의 진입을 저해하고, 소셜벤처처럼 사회적미션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기업은 현행 제도에 편입되지 않으며 인증유형을 맞추기 쉬운 기업만 진입하는 효과"(16.12월, 토론회)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부 사업 참여 확대·우대** 등에 힘입어 **창업·진입 수요 증가** 예상

* 수의계약 한도 상향 조정(2천→5천만원, '19),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가치 반영, 도시재생·친환경·사회서비스 등 관련 정부·지자체 사업에 참여시 가점 부여 등

구분(시행)	사회적기업('07년)	협동조합('12년)	자활기업('12년)	마을기업('10년)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목적	취약계층 고용 창출, 서비스 제공	조합원 권익 향상, 지역 사회 공헌	수급권자 등의 자활 지원	지역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근거법률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기초생활보장법	행안부 지침
개수(종목)	2126개	14,485개 (233개)	1,092개 (179개)	1,514개 (45개)

* 소셜벤처(500여개 추정)

- 법 제정 10년이 된 현재, 등록제 전환으로 진입장벽을 낮춰 **다양한 사회문제가 사회적기업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 제3차 기본계획('18.11월 발표)에 등록제 개편을 포함
- 한편, 질적 수준 하락, 정부지원만을 쫓는 **偽裝** 사회적기업 증가 등에 대한 **우려도 있어 보완대책 병행 추진**

사회적 기업 등록제 전환

2. 등록제 도입 개편 방향

- (기본 방향) 현행 인증제 요건을 **완화**하여 등록 요건을 설정*하고 등록에 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
 - * 현행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제도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기존 인증 요건을 완화한 형태로 개편할 필요
- 이와 함께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의 사회적기업 정의 규정을 현실화하고 **평가 기능도 강화**

◆ 창의·혁신형 사례(未 인증·지정 기업)

- * (카우카우) 우유로 점토 등 친환경 교구 제조('16. 소셜벤처 경영대회 수상)
- * (케이오에이) 캐시미어(몽골) 등 공정부역소재로 제품생산·판매('15. 육성사업)
- * (필더필) 공연 기획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 등('15. 소셜벤처 경영대회 수상)

- ① 인증제(고용부장관, 7개 요건) → 등록제(시·도지사 위임, 2개요건 폐지)

- 재정지원 사업의 주체, 지역중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등 고려, 시·도지사에 **등록 권한을 위임, 등록증을 교부하는 방식** 추진
 - 등록증 대여·양도 불가, 폐업·등록 취소 시 시·도지사에 반납, (시·도지사는 고용부장관에게 등록 현황 보고)
- 등록요건은 현행 인증요건 중 조직형태 등 기본적인 사항,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징표적 요건은 유지하되, **실적요건은 폐지**

- ② 사회적기업 정의 현실화

- 취약계층 일자리(68.6%)·사회서비스(6.2%, 혼합 9.4%), 지역사회 공헌(4.8%) 외에 **기타형(11.0%)도 인증***해오고 있으나, **활성화 미흡**
 - * 기타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을 판단하여 인증(영9조4호)
- 또한 국제공헌(공정무역), 공유경제(셰어하우스), 기술기반 벤처 등 **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가의 인증 장벽이 높고 지원도 미흡**
 - * 인증제가 취약계층 지원 부분을 강조함에 따라 공동 창업, 1인 기업 등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인증이 불가
- 이에 사회적기업의 정의·목적(법2조·8조)에 **'창의적·혁신적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을 추가**하여 명확화하고,
 - 재정지원도 **판로·금융 등 간접지원을 확대하여 성장 생태계 조성**과 **자생력 강화** 추진

(법2조 개정)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창의적·혁신적인 방식을 통한 사회 문제의 해결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 '미흡' 정의 추가

③ 평가와 연계하여 지원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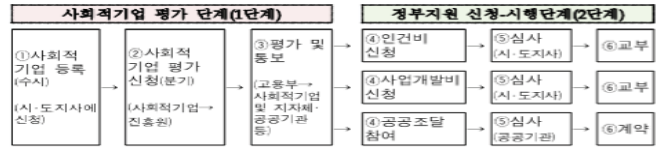
- ☞ **등록기업 평가(2단계)**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지원내용도 차별화
- 등록기업은 기존의 ① **사업보고서**(매년 1회 고용부에 제출), ② **경영공시**(매년 1회) 외에 ③ **기업평가**(유효기간 1년 혹은 2년)를 받게 됨
- 평가된 “**사회적기업평가보고서**”에 따라 **일정기준(절대평가) 이상에만** 재정·관료·금융·구매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부처간 협의·통일)
- * 「**사회적기업평가법**」을 구성(19. 1.), **경제적·사회적 성과 평가지표**를 확정하고, 평가 실시(19. 하반기 시범 목표) → 기존 미달 기업(現 예비수준 미달) 지원서 사유서 작성, 공공구매 실적 인정 제외 등
- 기업 평가는 '17년부터 시범운영 중인 현재의 평가지표를 **정교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 표 지표 >

관점	범주	영역	측정지표
사회적 성과	조직 미션	사회적 미션	1.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2. 사회적 성과 평가체계 구축
	사업 활동	주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수준
		사회목적 재투자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조직 운영	운영의 민주성	6.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경제적 성과	재정 성과	고용창출 및 재정성과	8. 근로자 임금수준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10. 고용성과
혁신 성과	기업 혁신	혁신성	11. 매출성과
			12. 영업성과
			13. 노동생산성
			14. 기업 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 특히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에 관한 지표를 강화하여 **偽裝·부실 사회적기업 판별에 주로 활용**

- 이후, 인건비, 사업개발비, 구매, 금융 등 **사업별 목적**과 사회적 성과를 반영한 **각각의 심사안을 마련하여 지원 여부·수준 평가**
- * 현 예비사회적기업 수준의 등록 사회적기업은 선정이 가능하도록 기존 설정 예정



- 등록기업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는 연 1회(4월)로 축소하고, 기재 항목도 영업활동 유지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으로 간소화

④ 성장 단계를 고려한 지원 체계 마련

- 등록기업 중 정부지원·공공조달에 참여가 어려운 **초보단계 기업**(예: 예비지정 前 창업성공팀)은 컨설팅, 비즈니스 고도화 등 **우선 경영 내실화 지원 확대**
- 중기부·금융위 등 타 부처 지원 제도와 연계하여 상품 개선, 비즈니스 고도화, 관료·금융 지원 등 제공
- * (예) 민·관 공동창업자 발굴육성사업(TPS)-코트라 해외진출기업 지원사업(중기부), 사회적가치 신용 반영·사회적경제기업 전용 기금조성 (금융위) 등
- 기업평가 결과 사회적 목적 실현도 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기업에 대해서는 **민간·공공부문의 판로, 금융지원 시 우선 추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

⑤ 지역, 민간 네트워크 역할 강화

- **당사자조직, 네트워크 등 민간의 역할 확대**
- 사회적경제 규모화 및 기업간 상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컨소시엄, 프랜차이즈형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신설·확대

- 그밖에 사업 발굴 등에 있어서 사회적경제기업 및 당사자조직 등의 의견을 수시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소통창구 운영**
- * 공식적인 의견 전달 채널 구축·상시화(당사자조직들이 既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 정책 포럼」(연 4-5회) 등을 활용)
- 또한 부실·偽裝 사회적기업이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여 기업평가 제도 외에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민간차원의 자정 활동 등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사업을 발굴·지원할 예정
- **중앙-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 강화**
- 중앙부처, 시·도가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등록기업별 현황, 고용·지원 이력 등 파악 가능한 **통합정보시스템**(진흥원) 재구축 추진(20년)
- 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 및 지자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간 공동 워크샵,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업무의 유기적 연계 촉진
- **전달체계 정비**
-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를 사회적기업 평가위원회*로 재편
- * 진흥원 내 사회적기업평가 사무국을 설치하고,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평가를 위한 심사 서류 접수, 현장 실사(필요시) 등 업무를 지원
- 진흥원 내 사회적경제 지원 및 평가 관련 조직 확대·강화
- * 사회적경제실 신설(19. 15명)

기타 등록제에 관한 우려

- 불량 사회적 기업의 양적 확산**
사회적 기업으로의 진입이 쉬워진 만큼 등록만 해놓고 운영을 하지 않거나, 사회적 가치는 거의 창출하지 않고 이름만 사회적 기업을 거는 불량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
- 사회적경제 섹터 내의 혼란이 더 문제**
기존 인증 사회적 기업들이 등록 사회적 기업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어 주도권 싸움
- 사회적경제 조직을 관리하는 행정 조직의 혼란**
신규 사회적 기업 증가시 감당할 인력이 행정 당국과 중간 지원 조직에 부족. 대부분의 지자체에는 사회적경제 담당 부서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 전문성이 부족.

예산 문제



취약계층 고용한 도내 사회적기업, 예산 부족으로 임금 못 줘 2018.08.19 | 대경일보
 기재부가 지난해인 2017년 4월 선정, 8월 확정해 사용하는 예산이다. 이렇듯 경북도의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것은 3가지 변수가 겹치면서 발생했다. 지난해...



김현권 의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예산부족 대책 마련해야" 2018.08.23 | 더 리더
 사진 = 국회의원 김현권씨도 광역지자체들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고용...

- ▶ 김현권 의원, 사회적기업 고용 지원 예산 부족 해... 2018.08.25 | 한국영농신문
- ▶ 김현권 의원, 사회적기업 고용지원 예산부족 해결 ... 2018.08.23 | 일간대한뉴스
- ▶ [뉴스위크-김현권 국회의원] 사회적기업 고용지원 ... 2018.08.23 | 뉴스위크

사회적기업 일자리 예산 66억 부족하다 2018.08.24 | 경북도민일보

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사·도 광역지자체들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고용...



폐지수집 어르신 175만명, 폐지로 캔버스 만드는 사회적기업 러블..
 2019.03.12 | YTN | 다음뉴스

특해 기업의 사회공헌부서와 함께 폐이퍼캔버스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3월부터 개학을 하여 학교 등...

- ▶ 폐지수집 어르신 175만명, 폐지로 캔버스 만드는 ... 2019.03.11 | YTN RADIO



정부의 미흡한 '사회적 기업' 지원예산 편성에 불만 민심

2018.08.28 | 프레시안 | 다음뉴스

않았다며 "이런 과정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부족 현황과 원인 © 프레시안 이런 중앙정부의 미흡한 운영에 경색을 포함한...

일자리창출사업 예산관련 시군 협의사항

예산현황

- 총사업비 : 6,717백만원(지독 5,037 도비 504, 시군비 1,176)
- 예산현황 (총사업비기준, 단위:백만원)

2016년 일자리창출사업			집행액 (1-4월)	잔액	예산소모 (8-12월)	예산부족액	필요한 지출액
2016 교부	2017 이월	예산잔액					
6,143	574	6,717	3,714	3,004	6,340	3,336	(904)

※ 평균1인 월 120만원지급 / 고용인원 700명
 ⇒ 총사업비 33억(국비 25억) 부족 예상

예산 부족 원인

- 최저임금 인상 (월 1,478,790원 → 1,724,850원), 취약계층 및 계속고용 보조금 비율 20%상향 ⇒ 1인/월 평균보조금 80만원→120만원, 50%증가
- 월평균 고용 인원증가('17년 560명→'18년 700명, 140명 증, 25%)
 - 사회적 여건 변화 : 기업 매출액 상승으로 인한 고용증가

그간 추진경과

- 고용노동부 방문 건의(18.7.4)
 - 지역자율일자리창출사업 예산 여력이 있는 시도 파악 후 중재(조정) 요청
 - 2019년 국비신청(56억) 기재부 원안 통과 협조
 - 재정지원사업 지원변경(인증위약계중 계속고용 인센티브 삭제)
 - 사업개발비(5억7천) 일자리제정지원사업으로 예산변경 사용
- 타 광역시 협의사항
 - 충남도 방문('18.7.4) : 여력 예산파악 후 예산실과 협의
 - 부산시 유선통화(수사로) : 10월 이후 예산여력 파악(2-3차 공모예정)

시군 협의사항

- 신규채용은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대체안내
- 전문인력 신규채용 중단
- 2018년 2차 공모 : 신규(제참여 포함)는 제외, 재심사는 7월 공모예정
- 도 예산으로 추정확보(도4,시군6)
- 시·군간 예산재조정

예산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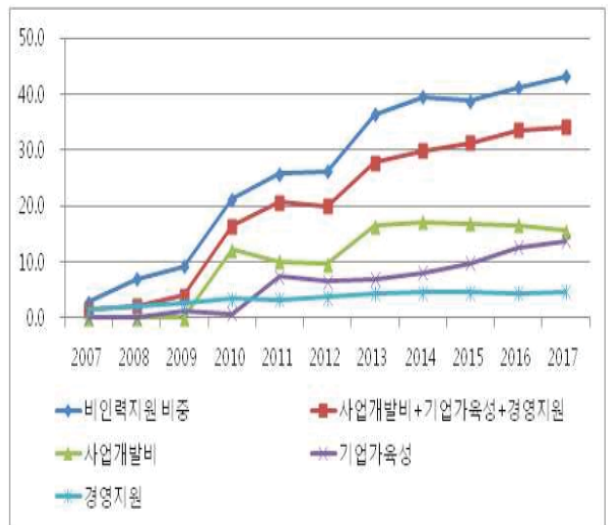
<표 2> 사회적기업 예산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총계	인건비지원	비중(%)	비인건비지원	비중(%)
2007	121,541	117,972	97.1	3,569	2.9
2008	140,713	130,885	93.0	9,828	7.0
2009	189,512	171,852	90.7	17,660	9.3
2010	151,277	119,181	78.8	32,096	21.2
2011	163,640	121,489	74.2	42,151	25.8
2012	181,662	133,918	73.7	47,744	26.3
2013	169,123	107,525	63.6	61,598	36.4
2014	160,554	97,003	60.4	63,551	39.6
2015	149,867	91,560	61.1	58,307	38.9
2016	143,132	84,071	58.7	59,061	41.3
2017	131,357	74,500	56.7	56,857	43.3

주 : 저자의 분류 및 계산에 의한 결과. 인건비에는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을 포함. 비인건비 지원은 그 외 모든 것을 포함함. 자료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각년호

<그림 3> 비인건비 지원의 구성 내역 변화



주 : 저자의 분류 및 계산에 의한 결과. 자료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각년호

사회적 경제 관련 법제, 앞으로의 과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조속한 제정

개별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원,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을 뿐, 사회적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 법적 성격의 법령이 부재하여, 체계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실정,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총괄, 조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민간, 시장 영역 전반에 걸쳐 사회적가치와 공공성이 의사결정 및 실행의 주요한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견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조달, 금융, 부동산 등 개별영역에서도 사회적책임조달, 사회적금융, 사회적 부동산을 위한 개별 법령의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으로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특히 공공조달은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분야로써,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재화 구매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를 열어 주기 위함.

-사회적기업 개념의 재정립,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을 가진 제3의 법인격 도입 필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의 통합생태계를 조성하고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 (영국 공동체이익회사(CIC), 미국 자선회사(BC), 유연목적회사(FPC), 활성화 및 투자 위한 저영리유한책임회사(LLC, L3C)

사회적 경제, 기타 앞으로의 과제

• 사회적 경제 주체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계 필요

- 사회적 경제협의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경제 협의체 간 상호 협력강화 및 상호 거래활성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경쟁력 강화
- 권역별 사회적 경제 활성화 네트워크의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활동 및 성과 필요.

• 사회적 경제에 대한 홍보 및 인식의 확산과 가치 공유 확대

- 윤리적 소비자층 확대, 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제고와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 노력 확대
- 민간 기업 주도의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을 통해 사회적경제 주체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연계 기업의 착한 이미지 제고 등 기업과 사회적 경제 주체 간의 상생을 위한 연계 강화

•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교육 프로그램 확장

- 지도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종사자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컨설팅 기회 확대

• 전문성을 갖춘 부처형 지원확대 필요

-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의 성장정책 및 계획을 제시할 필요.

• 자립성 갖추기 위해 여건 조성(사회적 금융, 투자 확산 가능하도록)

- 수익의 40% 환원?

환경영역에서의 사회적 혁신 움직임

- **집합적 소비, 공유 경제의 경향 확장**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독점적 소유권보다는 접근성을 중시
자동차 뿐 아니라 자전거, 주택, 가구 등 공유 분야 범주 확장되고 있음
-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소비하는 방식에 관한 사회적 혁신 확장**
에너지 효율을 개선, 일회성 제품의 사용을 지양하거나 일상 속에서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 증대
-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해 커뮤니티 단위의 환경 행동이 도입**
에코타운 및 공동 거주 등 지속가능한 거주와 대중교통을 이용한 생활양식을 모색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구성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발전시키며, 개별 가구나 소규모 마을을 대상으로 기술의 확산을 촉진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
- **지역화폐 운동**
내부 자본 순환이 경직되고 주류 금융시장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사회-경제적 틈새 매우며 사회적 혁신

환경 분야 현 사회적 경제의 한계

- 현재 우리의 환경 분야 인증 사회적 기업은 공공재 혹은 공유지의 비극에 해당하는 기후변화대응 문제를 직접 포괄하는 사회적 기업보다, **전통적인 폐기물 수거/재활용, 청소위생, 유기농 식품 등에 치우침**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중심으로 접근 하다 보니, 지속가능발전 및 기후변화대응 등 미래지향적 /지역공동체 중심적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한계
-사회적 기업 인증시 이를 평가하는 위원회의 미션 관심도, 이해도 부족
- 사회서비스 분야는 일자리 창출 분야에 비해 성과 측정이 수치로 환산하는 것이 힘들어, 인센티브 받는 것이 어려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분야로 몰리는 경향)
- 현재 고용노동부 일자리 중심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하에서는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사회적 가치 인정 어려움. 현행 법제상 고용노동부의 인증심의회에서 환경질 개선, CO2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 생물종다양성 보존 등 **환경기후분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적 목적 실현 인정이 어려움**, 객관적 입증 및 논리개발 시급
- 지원에 있어서는 단순 인건비 지원보다는, **유형별로 노동, 자본, 설비, 기술 등 요소투입 특성에 맞는 지원 필요** (현행 정책은 인건비와 사업지속성 제고를 위한 시장개척 등에만 자금을 지원하나, 실제로 재활용 분야에서 설비나 자본재 지원요구가 큰 실정)

환경 분야 현 사회적 경제의 한계

•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부족

공공부문에서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간은 5년이며, 이 기간 이후 전문성 및 자생력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회적 기업이 대다수. 이에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현 제도와 같이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저해하는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기업별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자생력 강화, 제품개발비 등 지원예산 확대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등의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 또한 기업의 영리활동(제품 및 서비스 생산, 판매 등)에 대한 지원을 기간을 한정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기업이 수행하는 가치 중심적 사업에 대한 지원은 기간을 한정하지 않아야 함.

• 소비자들의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인식 부족

사회적 기업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교육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업의 노력만으로 한계. 친환경성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가치.

• 지원 및 정책에 있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 부족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의 성장정책 및 계획을 제시할 필요.

에너지 복지과 사회적 기업

1. 연구배경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가 필수적이며,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도 희생될 수 없다."(윤순진, 2003)

에너지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2005년, 당시 민주노동당 조승수 전 국회의원 **에너지기본권**에 대한 법안 발의

2005년, 여중생 화재 사망 사건

2006년, **에너지기본법 제정**, 한국에너지재단 공식 출범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에너지 공급, 에너지이용 효율 개선,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

2010년, 에너지법으로 격하

2015년, 에너지법에 **에너지복지** 조항 신설 (제16조의 2)

2016년, 에너지기본권 개념을 명시한 **에너지복지법안** 발의 (이찬열 의원 대표)

연구대상

<우리나라 에너지복지 관련 사회적경제 현황>

구분	전국	서울시	상세
사회적기업 ¹⁾ 1,877개	39개	4개	주식회사 나눔하우징(2011), 일촌나눔하우징주식회사(2013), 두꺼비하우징(2013), 주식회사 금빛가람종합개발(2013)
마을기업 ²⁾ 1,466개	3개	1개	마을닷살림 협동조합(2013)
협동조합 ³⁾ 12,544개	32개	3개	제로에너지시민협동조합(2017), 에너지돌봄사회적협동조합(2015), 에너지복지사회적협동조합(2014)
자활기업 ⁴⁾ 1,149개	0개	0개	
총 개수	74개	8개	

1) 2017년 기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인종 사회적기업), www.socialenterprise.or.kr, 2) 2016년 기준, 마을기업 홈페이지, www.cbhub.or.kr, 3) 2017년 기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협동조합), www.coop.go.kr, 4) 2016년 기준,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

에너지복지와 사회적경제의 만남

7. 결론

◆ 정책적 제언

- ① 사회적경제의 에너지복지 비즈니스모델화 기반 조성
- ②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
- ③ 국가, 시장, 사회적경제가 협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④ 사회적경제가 에너지복지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제약이 될 수 있는 권한 개선
- ⑤ 에너지복지 법적 기반 마련

도시계획 개발에서의 사회적 기업

-미국 CDC(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을 중심으로

- CDC(지역 커뮤니티 기반 개발회사)의 기준

- (1) 비영리 민간 개발 단체 (2)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 (3) 커뮤니티 기반 활동
- (4) 적어도 한 건물 이상의 주거 또는 상업 및 산업 개발 프로젝트의 수행

- 배경

정부 주도의 대규모 철거 후 재개발 단지 건설 위주의 정책이 실패하면서, 공공이 민간부분의 힘을 빌려 지역 커뮤니티의 수요를 반영하고 개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등장하였고, 1970년대 이후 빠르게 성장

- 특징 (지역 커뮤니티를 이해하는 조직원 + 전문성 있는 조직원)

- 그 지역의 리더들에 의해 운영, 1/3 이상이 커뮤니티 거주자로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
-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
- 정부의 LIHTC, CDBG, HOME 등 공적 보조(80% 이상) 상당
-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교육, 문화, 예술 기능 등 복합 개발

- 우리 제도의 과제

- 일관된 금융지원정책 필요(장기 고정금리 금융지원책)
- 공공조직 의존도/주도성 탈피
- 개발/금융 노하우와 경제개발 전략에 대한 노하우

친환경 소비 확산

친환경 행동과 소비의 확산은 소비자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신뢰 형성 뿐 아니라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유통 구조와 기업의 사회적 관계 및 역할에 이르는 전 과정에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매개이자 새로운 패러다임이 사회적 경제.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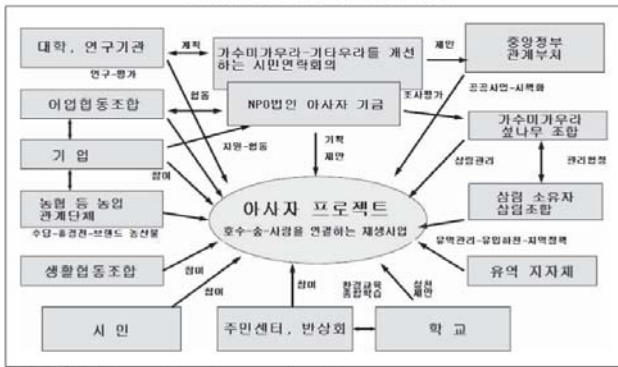
1. 친환경 행동,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굴과 확대가 필요.
2. 환경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전문화된 중간조직 필요
3. 민간 플랫폼을 활용한 친환경 행동, 소비를 확대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 부당한 환경성 표시 방지

대안

-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사회적 경제 중간조직으로서의 역할 확대
- 환경형 예비 사회적 기업 창업지원 및 지정 확대
- 환경부는 환경형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에 국한하지 않고, 친환경 소비와 연계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 발굴하여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등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 민간기업과 연계해 친환경 제품 개발을 위한 씨드머니를 제공하는 등 창업 지원 정책 확대 필요.
- 착한 소비와 결합된 프리미엄 환경표지 도입.

환경 네트워크형 재생사업에서의 사회적 기업

<그림 2> 아사자 프로젝트의 조직형태



자료: (아사자재단, www.kasumigaura.net/aseza/)

<표 3> 아사자 기금 2008년도 예산
(2008년 4월 ~ 2009년 3월)

수입	지출
회비 2,000,000 엔	위탁사업 20,000,000 엔
기부 2,500,000 엔	조성사업 15,000,000 엔
위탁사업 20,000,000 엔	사무관리 6,200,000 엔
조성사업 15,000,000 엔	에비비 27,061,317 엔
기타수입 1,700,000 엔	
이월금 27,061,317 엔	
합계 68,261,317 엔	합계 68,261,317 엔

<그림 3> '아사자 프로젝트'의 공간적 전개



자료: (아사자재단, www.kasumigaura.net/asaza/)

- 수직적 행정으로 개별적으로 실시할 수 밖에 없었던 사업을 연결시켜 시너지 효과를 도출하는 모형 도출
- 지역주민, 사회적 경제조직, 기업, 행정 등 다양한 섹터 참여
- 산업과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

○ 영국 DECC (Dept Energy, Climate Change) 사례: 신재생에너지 관련

출처: SEC (Social Enterprise Coalition, 2009 내부자료)

기업명	웹사이트	사업분야 및 특징	사업성과
Energy4all	www.energy4all.co.uk	-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지원 - 기업지원 협동조합 소유	- 산업경험, 지역사회참여, 사업노하우를 결합, 서비스제공 - 행정,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
Renew	-	- 에너지서비스전문기업('ESCO') 조합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업개발, 지원관리	- 저소득지역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은 화석연료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연간 5,000톤이 넘는 탄소배출량 감축
CoRE	www.corecoop.net	- 농촌기반 에너지협동조합 - 지속적, 저비용, 안전한 재생 에너지 시스템 공급	- 뉴캐슬, 워릭, 알런윅 등의 도시에서 폐식용유, 혐기성 박테리아 플랜트를 이용한 소형열병합 장치 설치
Sherwood Energy Village	www.ahk92.dial.pipex.com	- 1994년, Ollerton지역의 광산이 폐쇄된 후 지역 재건을 위해 개발사업 진행	- 폐광을 개발하여 주거, 사무, 오락, 교육 등의 복합시설화, 폐광 전 600명 수준이었던 일자리가 두 배로 증가
Ebico	www.ebico.org.uk	- 비영리 에너지 공급업체로써 가스, 전기 등 에너지원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	- 소득, 사용량에 따라 다양한 지불 방식을 도입하는 등, 에너지에 대한 합리적이거나 차별화된 지불방법 도입
Energise	www.energiseconsulting.com	- 에너지효율 컨설팅 업체로써 기업, 단체 등의 컨설팅 진행	- 수익의 대부분을 SE의 요구사항인 'Triple Bottom Line'에 대해 투자

○ 영국 DEFRA (Dept Env, Food, Rural Affair) 사례: 신재생에너지 제외

출처: SEC (Social Enterprise Coalition, 2008 내부자료)

기업명	웹사이트	사업분야 및 특징	사업성과
Rockingham Forest Trust	www.rockingham-forest-trust.org.uk	- 환경 및 지역발전을 위한 단체 - 기업과 커뮤니티의 참여로 Rockingham 숲 보존 및 교육	- 환경보호와 교육 및 레저를 목적으로한 종다양성과 조경 관리 - 환경 보호와 자원관리를 위한 공동체의 참여
Furniture Link Bedford	www.flb.org.uk	- 가구, 가전제품 재활용 사업 - 집 청소 및 이사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기반 지원, 교육 제공	- 낭비자원 재활용 및 빈곤층 지원 - 지역공동체 전역 훈련, 참여
Magpie Recycling	www.magpie.coop	- 직원소유구조의 기업으로 주거 및 상업지구 폐기를 재활용	- 지자체가 재활용 포기 수거물도 재활용, 홈리스지원 및 일자리제공
Stable Trading Company	www.stabletrading.co.uk	- 유기농 유통프로젝트 벤처 - 소외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제공	- 건강한 먹을거리 및 로컬푸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교육 - 소외계층을 위한 운송수단제공
Stroud Community Agriculture	www.stroudcommunityagriculture.org	- 공동체 공동소유를 통한 지역 유기농 농장 운영	- 지역의 고품질 생산 가능 - 농업 및 식품 이슈에 대한 교육 - 공동체와 농업인들의 리스크 분산 - 지역으로부터 "부의 유출" 절감
Tackley Village Shop	www.virsa.org	- 지역 우체국의 철수로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복합 쇼핑센터	- 유통서비스 공급의 시장실패 대체 - 상점들의 수익을 다시 공동체에 귀속, 장거리 이동의 필요성 감소

참조 논문 및 자료

- 도시계획 개발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역할(미국 CDC)를 중심으로 - 김경민, 홍보영
- 녹색성장 분야 사회적 기업의 가능성 - 네모토 마사쓰구
-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사회적 기업 - 전대욱, 최인수, 박승규, 황석준
- 사회적 경제의 법, 제도 현황과 새로운 법체계 고안 - 이경호, 양동수, 이에은
- 에너지 복지와 사회적 경제의 만남 - 유주연
- 사회적 경제의 법, 제도 및 조직에 관한 연구 - 강순화, 전영옥
-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친환경 소비 확산 방안 - 김동현 외(KEI)
-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검토 - 손영기
- 사회적 기업 관련 법제에 관한 비교연구 : 영국, 이탈리아, 미국, 한국을 중심으로 - 이회수

패널토론1

대기업

김민석

LG전자 CSR팀 부장

제9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토론문

김민석 (LG전자)

1. 들어가는 글

최근 미세먼지, 해양 플라스틱, 지구온난화, 생물다양성, 화석 에너지원 등 환경과 관련된 이슈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기업은 이러한 환경오염의 주범인가? 아니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에 도움이 되는 해결사인가?

지금까지 기업은 일반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체로서 불명예를 안고 지내왔다. 실제로 기업들이 자연환경에 해를 끼친 사례는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과,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등의 국내 사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업이 유발한 많은 환경오염 사례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1987년 UN '우리의 미래' 보고서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다루어진 후, 기업은 점차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사회에 알리기 시작하였다.

나무심기로 유명한 유한킴벌리의 경우 1984년부터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통해 36년간 5,0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고, 얼마전에는 대기오염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황사마스크 50만개를 기부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SK그룹은 최근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 추구를 선언하고, 사회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계열사 중 한곳인 SK건설은 실시간으로 공기질을 확인할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하고 커뮤니티 시설 또한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환경 최적화 시스템을 구현키로 하였다 (이와 유사한 서비스는 타 건설사도 제공 중).

또한 LG전자의 경우, 작년 10월 사내에 공기과학연구소를 열고, 유명 교수진과 협업하여 제균 등 공기청정 관련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LG그룹은 초, 중, 고교에 대용량 공기청정기 1만대를 기부키로 약속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환경부와 건설회사들이 자발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참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스스로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방안을 시행하는데, 토목공사 등의 작업시간을 줄이고, 터파기, 기초공사 등 날림먼지가 발생하는 공정을 단축하며, 굴착기, 덤프트럭, 노후 기계 사용제한 등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에 참여키로 한 것이다.

이렇게 기업은 과거 환경오염의 주범에서,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발생시키는 환경오염부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환경을 보호하고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2. 환경을 위한 기업의 노력

전 세계적으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 폐기물 등의 환경문제가 지역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몇몇 기업들은 이러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에 앞장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업 활동의 형태를 다음 세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역량,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따뜻한 기술'형, 두번째는 기업 단독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고 있는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신뢰의 파트너십'형, 마지막으로 임직원, 고객과 함께 사회, 환경적 문제인식을 공감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함께하는 나눔'형 이다.

1) 따뜻한 기술 (기업의 기술, 역량을 활용한 환경문제 해결)

리바이스, 아디다스, 유명한 청바지 브랜드 리바이스는 페트병을 업사이클링 하여 Waste, Less Jean 이라는 라인업을 갖추었다. 즉 페트병에서 실을 뽑아내어 청바지를 제작하는 것으로 폐 플라스틱으로부터 섬유를 뽑아내는 기술을 활용한 것인데, 아디다스 또한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폐 플라스틱으로 운동화를 만들고 판매하고 있다.

아사히, 아사히는 공정과정 중에 나온 배기가스를 다시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코제너레이션(cogeneration) 시스템과 제조과정에서 생긴 폐수 중 메탄가스를 재활용하는 폐수

처리 시설을 도입한 결과, 맥주 생산공정에서 생기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저장했다가 병, 캔 등 포장공정에 재활용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바라키 공장에서는 1996년부터 폐기물을 100% 재활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Interface Global, Bureo, 이 두 회사는 모두 바다에 버려진 그물을 재활용하여 카펫이나 선글라스, 스케이드 보드 등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 매년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 중 64만톤을 차지하는 것이 어망인데, 이러한 그물은 썩지 않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여 산호와 물고기가 버려진 그물에 걸려(Ghost fishing) 생태계를 망치기도 하고, 어업을 생계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야기시켰다. 그래서 Interface Global은 Net-Work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그물로 카펫을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현지 주민으로부터 버려진 그물을 구입하고 버려진 그물을 낚는 '그물 청소부'라는 일자리도 창출하였다. 그리고 Bureo 역시 넷포지티바(Net-Positiva)와 넷플러스(Netplus)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폐그물을 이용하여 선글라스와 보드 등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일시적인 재사용, 단순한 업사이클링이 아닌 근본적인 환경 문제해결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LG전자, LG전자의 경우도 'LG소셜캠퍼스' 라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중 하나로, 노동조합의 생산성향상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제조업의 강점이 있는 기업의 전문성을 살려 제조 또는 가공 업종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 생산시 필요한 노우하우를 제공하고 있다. 즉, 생산공정의 최적화, 물류흐름의 간소화, 도구/장비들의 적절한 관리방안, 현지 기업에 적합한 장비 설계 및 제작지원을 한 결과, 생산성이 최소 20%에서 40%까지도 향상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2) 신뢰의 파트너십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행복얼라이언스, SK그룹을 중심으로 대중의 참여와 기업, 기관의 자원을 한데 모아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행복얼라이언스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45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행복얼라이언스는 아동 문제 해결과 대중 참여를 위한 사회변화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의식 있는 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 참여하는 멤버사와 기부 연계 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개별로 사회공헌 활동 또는 사회가치 창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나, 이제는 협력을 통해 더 큰 시너지와 임팩트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LG소셜캠퍼스, 앞서 언급한 LG소셜캠퍼스는 LG전자와 LG화학이 2011년부터 친환경

분야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LG소셜캠퍼스는 공공, 학계, 민간, 비영리조직과의 다자간 협력모델로 잘 알려져 있다. 즉 각 조직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네트워크,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다양한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것이다.

LG소셜캠퍼스의 주요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자금지원'으로 지금까지 140억원을 130개가 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에게 무상지원 또는 무이자대출형태로 지원하였다. 이러한 지원 결과, 지원기업의 매출액은 26%, 고용인원은 13%가 증가하였고, 기업생존율은 93.7%에 이르고 있다.

두 번째는 '공간지원'으로 LG전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중 일부를 사회적경제 조직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약 740평 규모의 창업보육공간엔은 엑셀러레이팅 20개, 인큐베이팅 14개 기업이 있으며, 작년의 경우 20명의 공용증가 및 총 15개의 특허, 인증, 수상을 하는 성과과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을 활용하여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는 'LG소셜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트렌드에 맞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세 번째로는 '성장지원'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노동조합의 생산성향상 컨설팅이 성장지원의 한가지 사례이며, 지금까지 11개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컨설팅의 수혜를 받았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관련 해외연수를 통해 각 기업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뿐 아니라 지원기업 간의 자유로운 네트워킹을 유도하여 향후 상호 호혜적인 관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LG소셜체험단'은 파워블로거와 일반 시민들이 함께 LG소셜펠로우(LG소셜캠퍼스 참여기업) 기업을 방문, 체험하는 사회적경제 현장탐방 프로그램으로, 파워블로거들의 취재 후기를 통해 지원기업 사업 및 제품의 마케팅 효과를 높이고, 일반시민의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재육성' 프로그램은 사회적경제 영역의 인재양성뿐만 아니라, 대국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인식향상을 위해 진행하고 있다. 먼저 영상공모전인 '1분 1초 소셜영화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및 실천 확산을 위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더 나은 삶'이라는 주제로 1분 1초 분량의 영상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보며 사회적경제에 대해 스스로 고민해보고 '다짐'과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

과 수도권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지방의 사회혁신가 양성을 위해 로컬밸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이를 바탕으로 솔루션을 구체화하는 교육 기회 제공 및 프로그램 참가팀에게 지역 사회혁신을 위한 맞춤형 사업화 교육을 제공하고, LG소셜캠퍼스 펠로우들과의 네트워킹, 소셜벤처 데모데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향후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소비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3) 함께하는 나눔 (임직원, 고객과 함께 환경문제 해결)

다이슨, 영국의 전자제조기업인 다이슨은 최근 영국 런던에서 공기질 수집 센서가 부착된 배낭을 공개하고, 약 250명의 어린이들에게 배포하였다. 이 배낭에는 이산화질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PM2.5 및 PM10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센서와 배터리가 있고, 배낭 뒷면에는 "I am an air quality scientist (나는 대기질 과학자입니다)"라는 문구를 적었다. 즉 고객(학생)들과 함께 일상적인 환경에서 어린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실제 대기질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제시코자 하였다.

Global Volunteer Day. LG전자의 경우 UN이 정한 세계환경의 날(6월 5일) 전후에 환경관련 주제로 전 세계의 임직원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즉 각 국가, 지역에서 갖고 있는 환경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법인의 임직원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쉬운 방법으로는 회사 근처의 문화재, 자연보호구역의 환경정화 활동을 하는 것부터, LG전자가 생산하는 솔라패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발전하여 공급하는 활동, 대대적으로 환경관련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준비하는 법인까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환경, 즉 지구가 없으면 기업도, 사람도 있을 수 없다는 신념 하에 각자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LG러브레터, 지난 3월에는 LG전자가 생산하고 있는 시청각장애인TV의 경우, 이러한 장애인 특화용 제품이 필요한 기관이 있다면, 고객이든, 이웃이든 누구든지 상기 제품이 필요한 이유를 제출하면 심사하여 기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는 기업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기부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활동은 주위에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있는지 살피기를 바라는 의미로 고객과 임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3. 향후 과제

지금까지 기업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혹은 해결사로서의 양면의 모습을 모두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역할은 무엇인지 몇가지 제언코자 한다.

1) 환경을 위한 사회적기업 비즈니스 모델

대기업의 일방적인 지원은 지속성, 효과성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다. 지속적으로 환경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환경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트리플래닛, K.O.A, 바이맘, 파타고니아, 프라이탁 등 실제로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으며, 현재도 늘어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환경분야의 기업들의 성공사례는 환경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예비 기업가들에게 큰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진정한 협업, 효과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시너지

지금까지 정부와 대기업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왔다. 그렇다면 이제는 단순 지원을 넘어 협업,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적기업들의 지속성을 담보해 주어야 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안에 있는 조직끼리의 협업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사회가치, 사회혁신을 위해 많은 지원금, 투자금 등이 확보되어 있다. 자금은 넘쳐나는데 여러 규제와 높은 기준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곳은 그림의 떡이어서 지원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향후 이러한 자원들이 의미있는 곳에 시의 적절하게 사용되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인플루언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지속가능한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사회적기업의 초기에는 환경분야를 특정하여 지원한 대기업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환경은 우리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큰 영향을 주는 아젠다가 되었고, 이러한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활발한 활동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지금까지 보여준 것처럼, 공공보다 빠르고 대기업보다 민첩한 친환경분야의 사회적기업은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이 꿈꾸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공공, 민간기업이 지원하고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은 일방적일 수 없다. 그리고 혼자 할 수 없다. 굳이 거창하게 UN SDGs(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언급하지 않아도, 기업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사회에 가치를 만들고 기여를 해야 한다.

각 주체가 갖고 있는 진정성과 전문성, 관계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우리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고, 사회는 이러한 주체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며, 때로는 바른 길로 가도록 모니터링하며 자극을 주기도 해야 하며, 적극적이고 올바른 화폐투표 기능을 통해 사회를 위한, 공공을 위한, 환경을 위한 기업들에게 지속가능성이라는 답례의 선물을 해야 할 것이다.

패널토론2

당사자

김형수

사회적기업 트리플래닛 대표

반려나무

학교 숲과 반려나무 입양 계획서

트리플래닛 제안 자료

tree planet

• 본 문서에 기입된 모든 내용은 (주)트리플래닛의 비공개 상품 정보를 포함하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1

CONTENTS

+ 숲의 효과

미세먼지를 먹는 학교 숲과, 반려나무

트리플래닛 소개

2

흉흉한 매연을 내뿜는 도심지의 발전소,
그 옆에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습니다.



중국 북경을 제치고 대기오염이 심한 도시 2위로 뽑힌 서울.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집을 나서며 마스크를 챙기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2019년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영유아, 어린이, 노인을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선정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시 건강 취약계층 보호 강화한다...7가지 대응요령'도 마련

고양보 기자 kb1231@kuku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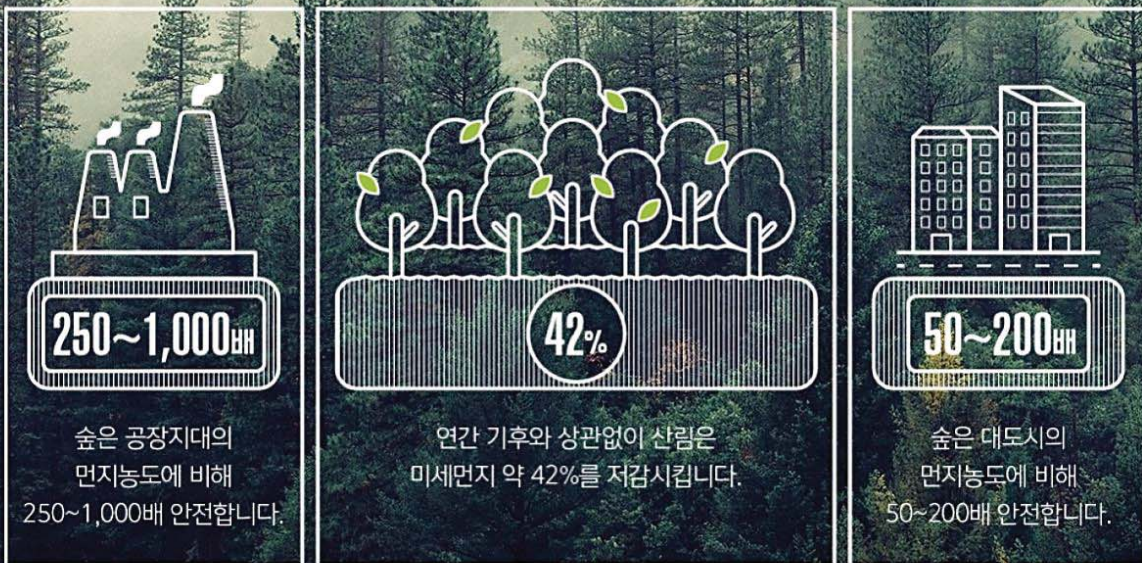
등록 : 2017-01-08 12:02:00 | 수정 : 2017-01-08 12:02:35 | 가-기+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이 강화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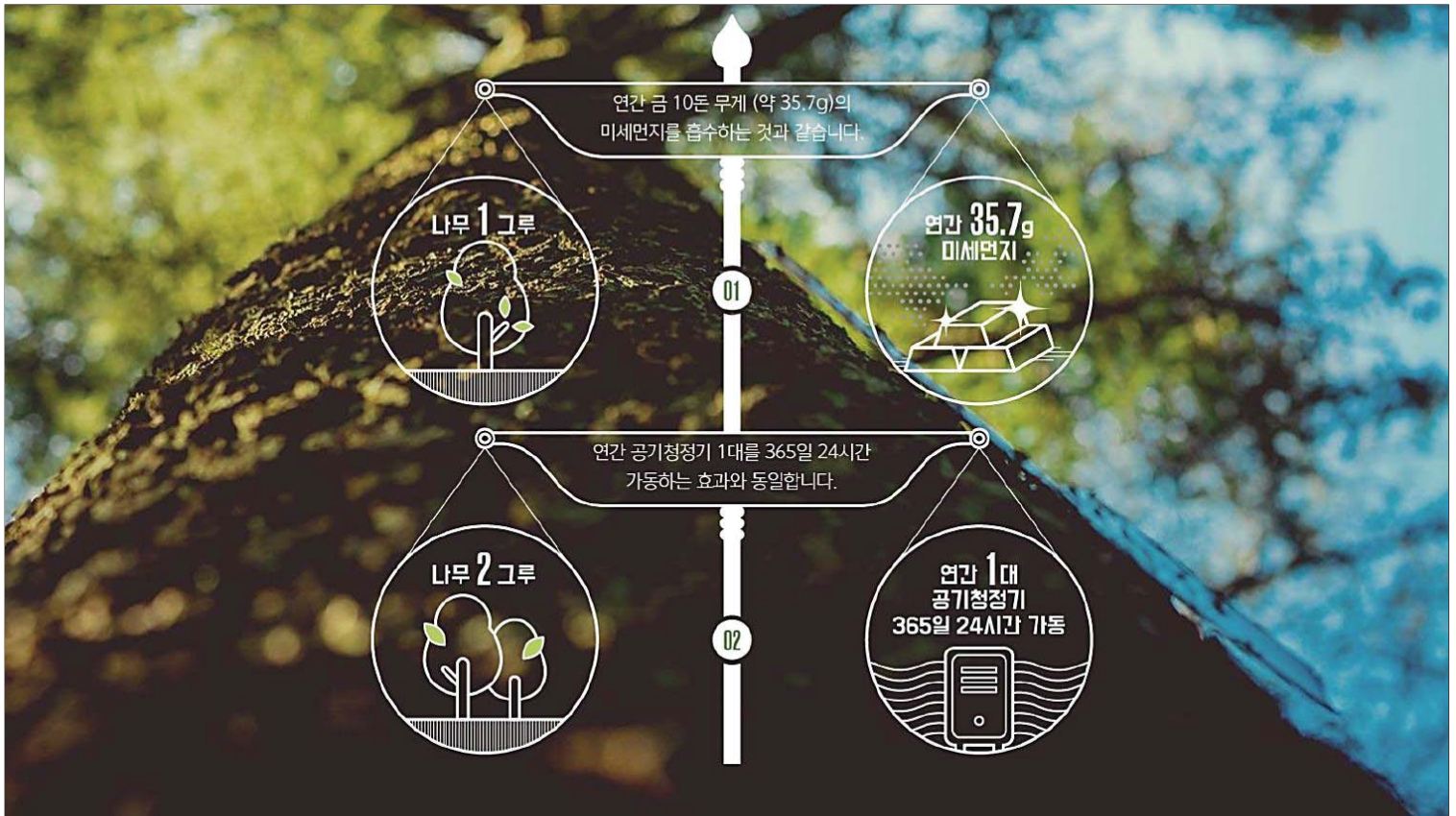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강화·개정하여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2015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기존 매뉴얼을 보완한 것이다.

먼저 '건강 취약계층'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영유아·청소년과 함께 노인을 포함했다. 양로원, 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대응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공간, '숲'



* 출처: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출처: The Nature Conservancy



CONTENTS

숲의 효과

+ 미세먼지를 먹는 학교 숲과, 반려나무

트리플래닛 소개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노는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놀이터의 아이들이 40년 간 약 40% 이상 감소



1972년, 밖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비율
80.2%



2013년, 밖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비율
38.9%

통계 출처 : 경향신문, 참고육학부모회, 서울 노원구
사진 출처 : 환경부정의, <[정보]미세먼지가 당신의 몸에 미치는 영향>

대중들이 본 캠페인에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What We Want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드는 캠페인

What People Want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캠페인

미세먼지 먹는 나무를 나누어 주는 트리트럭 캠페인은 나무 심는 활동을 더 새롭고, 세련되고, 즐겁게 만듭니다.



새롭게
이전에는 없었던 방식으로,

꼭 필요한 곳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을 찾아

더 많은 시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많은 초등학교, 복지관을 중심으로 실내 공기정화 나무를 분양합니다.



삼성SDI·조용우산 어린이재단,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숲 조성 캠페인 진행

▲ 조용우산 어린이재단, 삼성SDI가 후원한 미세먼지 취약계층 아동 지원사업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삼성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취약계층 아동 지원사업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삼성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취약계층 아동 지원사업 일환으로...

이날 행사에는 노경민 삼성SDI 중무고급 부장, 홍광희 기흥초등학교장, 김형수 조용우산 대표, 전용숙 조용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SDI 숲 조성사업은 국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고 환경정화는 대한 체육회가 위치한 서강대(서울) 삼성초(서울) 조용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심어진 노티나무 18그루와 함께 1천여송을 통해 삼성초 아이들의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에 기여하고 환경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기흥초등학교 학교 숲 조성 요청서

노란색 부분(제육관 뒤)	흰색 부분(신관 뒤)
약 50M	약 60M
잔디, 뒷밭으로 활용 중 도로에 인접해 있어 숲 조성 필요	긴 공간에 6개 정도의 나무만 있음 다양한 나무 보존 식재 필요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많은 초등학교, 보육원, 복지관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Safe Zone을 조성합니다.

13

미세먼지의 발원지 중국, 사막과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방지 숲을 조성했습니다.



중국 닝샤 인촨시, 징룽 회민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만든 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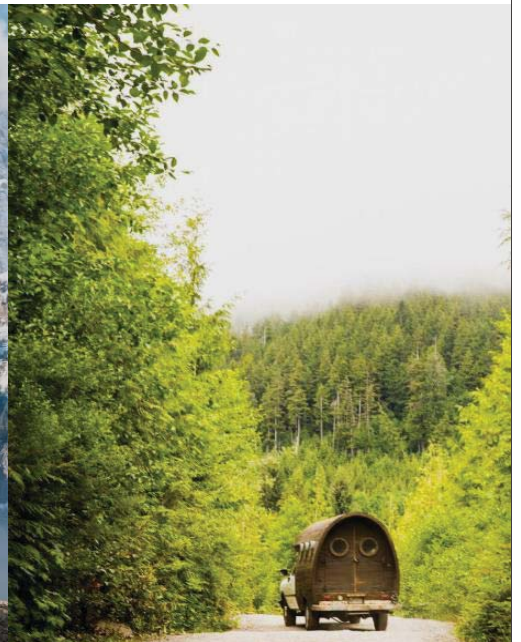
14



초등학교에 만든 숲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직접 심은 나무 아래에서 환경 수업을 통해
나무와 환경의 중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트리트럭(Tree Truck)으로 나무가 필요한 곳곳에 찾아가
반려나무를 입양 보내고, 아픈 나무를 치료합니다.



커피차량, 연탄봉사와 같이 트리트럭(Tree Truck)으로 학교에 반려나무를 기부합니다.



트리트럭을 타고,
반려나무와 함께
맑은 공기를 안겨드립니다.



한 교실에
다섯 그루의 반려나무를 입양하면,
아이들은 깨끗한 환경에서
숨 쉴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공기정화 반려나무를 소개합니다.

미국 NASA가 선정한 공기정화 식물

테이블 야자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선정한 공기정화 식물로, 1m 크기의 테이블야자가 하루 1L의 수분을 증발시킬 정도로 놀라운 공기 정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쉽게 키울 수 있으면서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실내에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특한 반려나무입니다.



미세먼지 공기정화 반려나무를 소개합니다.

평화와 풍요의 상징

올리브 나무

지중해 해안가의 선선한 바람을 맞고 자란 올리브 나무는 수 백년 동안 꾸준히 올리브 열매를 맺기 때문에 풍요로움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빠르고 활기찬 성장력 덕분에 실내 공기정화 식물로 소개되며, 인테리어 아이템으로도 인기가 좋아, 트리플래닛 반려나무 입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 반려나무만 가진 고유번호, '출생태그'

반려나무 한 그루가 입양되면,
필요한 곳에 한 그루의 나무가 심어집니다.

이 출생태그가 걸린 반려나무가 더 많이 입양될수록
더 많은 나무가 숲에 심겨, 든든한 숲 장벽을 만듭니다.



식물 키우기가 어려운 당신을 위한 양육 가이드

식물 키우기에 재주가 없다고, 말라가는 식물에게
부랴부랴 물 한 컵을 부어주었던 적이 있었다면,
이젠 걱정 마세요. 반려자님의 거주 환경에 따라
다른 양육법이 세심히 담긴 안내를 제공해드려요.



예시) 숲 조성 부지



실외 부지 - 교내외 식재 가능한 지역



실내 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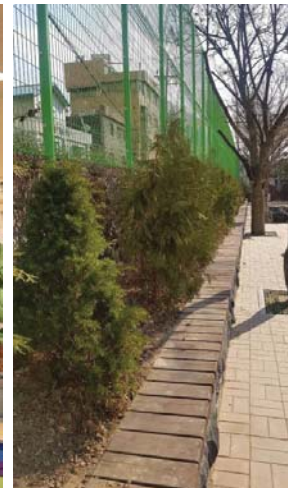
- 일반 교실, 돌봄 교실, 특별실 등

예시) 숲 조성이 완료된 모습



일반 교실, 돌봄 교실, 도서실, 특수교실 등

실외 운동장 차폐



CONTENTS

숲의 효과

미세먼지를 먹는 학교 숲과, 반려나무

+ 트리플래닛 소개

트리플래닛은 지금까지 전 세계 12개 국가, 180개 숲, 7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숲 조성 예정지 | 강원도 삼척 백두대간 보호지역 산불피해 복구 숲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의 산림을 복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숲 조성 예정지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멸종위기종 보호 숲

한반도 내 멸종위기종 보호지역에 숲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숲 조성 예정지 | 인천 수도권 매립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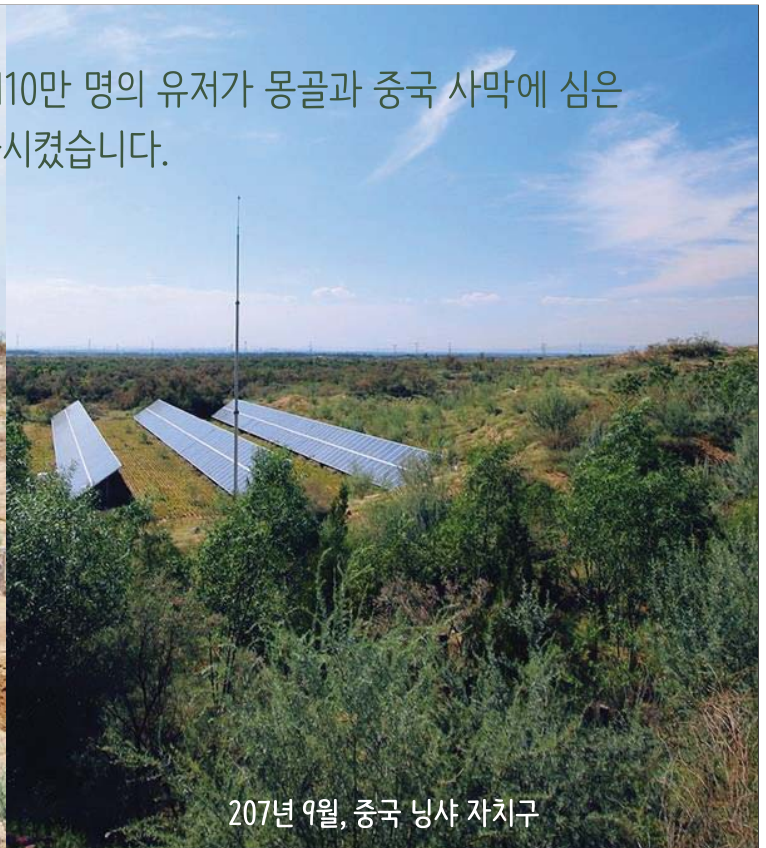
대륙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수도권 녹지 공간을 확장하는 미세먼지 방지 숲 조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트리플래닛 나무심기 게임을 통해 110만 명의 유저가 몽골과 중국 사막에 심은 43만 그루의 나무가 모래언덕을 숲으로 변화시켰습니다.



2013년 9월, 중국 닝샤 자치구



207년 9월, 중국 닝샤 자치구

시민참여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팽목항에서 4.16km 떨어진 곳에 은행나무 300여 그루와 추모시설이 마련된 세월호 기억의 숲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소녀들을 기억하는 숲을 서울 월드컵경기장 평화의 공원에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개발도상국 농가의 소득 향상과 환경 친화적인 농장 조성을 위해
 네팔 및 인도네시아에 커피나무 농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트리플래닛은 미국의 Social Impact 인증인 B Corporation으로부터
 사업의 사회적&환경적 가치창출 성과를 5년째 인증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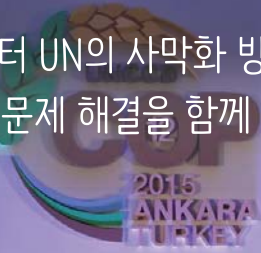


B Corporation이란?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고 임팩트를 창출하는 기업에
 부여되는 미국의 인증 제도



2012년부터 UN의 사막화 방지 기구인 UNCCD의 기업 파트너로서
지구 환경문제 해결을 함께 해왔습니다.



12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트리플래닛이 만든 숲의 가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적 410억 원

현재까지 식목한 모든 나무의 경제적 가치를 환산 했을 때 410억 원에 이릅니다.¹⁾

하루 300 그루

매년 4,699 CO₂ 톤 상쇄
(승용차 1,957대가 연간 배출하는 CO₂ 흡수)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 : 46,402,625원)

1) 출처 : 도시 나무 측정 - Capital Asset Value for Amenity Trees (CAVAT), 사막화 방지 나무의 가치 측정 -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공익기능 가치평가"

국내외 다양한 지자체/기관/기업과 숲 조성 협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자체파트너



NPO파트너



기업파트너



비즈니스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인재들이
트리플래닛의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AWAKEN YOUR POTENTIAL TO IMPACT THE WORLD





plant for all.

1억 그루를 향한 발걸음에 함께 해 주세요.

39

패널토론3

국제이슈

김정태

MYSC 대표



Logo: <https://www.opportunitias.com/one-planet/>

| 작지만 큰 1%의 시작



Craig Mathews



건강한 지구를 위해 함께 일하는 비즈니스, 비영리, 개인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

"환경에 대한 현명한 기부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과 활동가들을 한 곳에 모은다"

Image: The Gazette, Google

| 집중하는 이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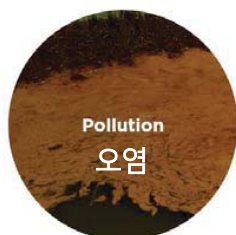


Image: 1% ForThePlanet



| 각 주체의 역할



기업 멤버

- 매년 매출액의 최소 1%를 풀뿌리 환경 단체에 기부금 및 다양한 형태로 지원



개인 멤버

- 매년 1년치 급여의 or 순자산의 최소 1%를 기부금 및 봉사활동으로 기부



- 멤버들에게 환경 전략 조언, 기부 인증(certify), 임팩트 확산의 역할 수행

Image: FlatIcon



| 규모

- 기업 멤버 1,500 +
- 기부금 USD 150,000,000[1억5천만] +
- 지원 환경단체 40개국 2,000곳 +



Image: 1% For The Planet



| 기업 멤버 사례: 해외 **파타고니아**



- 2016년 블랙프라이데이 100% For The Planet 캠페인

954

- 2017년 회계연도 기준 954개 풀뿌리단체에 지원

Image: Google



| 기업 멤버 사례: 해외 **꼬달리**



4 3 7 0 1 3 3

지금까지 심었고, 또 앞으로 심을 나무의 수

-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재배한 천연 재료로 화장품 제조하는 프랑스 화장품 브랜드
-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6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이 목표

Image: Google



| 기업 멤버 사례: 국내

파타고니아 코리아



꼬달리 한국 활동



오션카인드




강릉 중심으로 바다 보호 프로젝트 실행

Image: Google, 오션카인드



| 지원단체 사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를 드론으로 촬영

 녹색연합



- 제주도 연산호 보호 연구

 불교환경연대



-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버드나무 심기

Image: 각 단체 홈페이지

| 지원단체 사례 - 임팩트 확산

● Micro Beads 문제 제기

- 여성환경연대
- 환경운동연합

● 공동 성명서

-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정의재단,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등
- 관련 법 제정 촉구

● Micro Beads 사용금지

- LG 생활건강 자발적 사용제한
- 식품의약품안전부 "퍼스널 케어 제품에 micro beads 사용금지" (2016)



Image: Google

| 기업멤버 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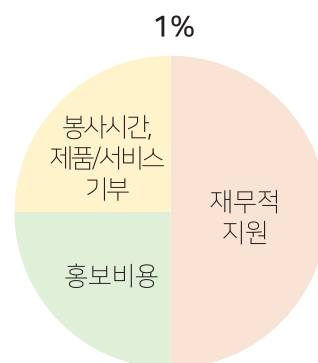
멤버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for the Planet' 홈페이지에서 가입 양식 작성 - 처음 멤버가 되는 경우 USD 200의 비용 지불 (첫 해 1%에 포함)
멤버갱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관련 문서와 기부 영수증 등을 리뷰하여 인증 - 총 매출에 따라 매년 멤버십 fee를 지불 (1%에 포함)
지원단체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for the Planet'의 기존 네트워크 안에서 선정 - 논의 하에 새롭게 선정 가능 - 지원단체 매년 변경 가능



Image: Google

| 기업멤버 되기

1%의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2분의 1이 재무적인 지원이어야 함 - 최대 4분의 1은 직원의 봉사시간이나 연관 제품 혹은 서비스의 기부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최대 4분의 1은 연관 홍보 비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



| MYSC의 1%도 지구를 위해



Image: MYSC



감사합니다 :)

패널토론4

사회적경제조직과 SDGs

김형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제9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토론문

사회적경제조직과 SDGs

김형미 (재단법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

○ 포럼 주제는 “사회적 경제…순환과 회복의 경제를 꿈꾸다: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사회적 경제 분야의 쟁점과 과제”인데 본 토론자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을 향해 사업목표를 정렬하고 임팩트(*)를 창출하자**는 내용으로 토론하고자 합니다. 본 주제에서 조금은 확장되는 내용이겠다 싶습니다.

* 경제활동을 통해 의도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 측정할 수 있으며 사회적 목표와 경제적 인센티브가 정렬되는 금융 메커니즘을 통해 실현가능

○ 2025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문 70/1, “Transforming our worlds: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상을 바꾸는 2030년 지속가능발전 의제)이 채택되어 SDGs가 국제사회의 공통목표로서 설정되었습니다. 기조강연에서도 강조했듯이 경제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생태계의 파국적인 소실을 막을 수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SDGs 목표 선정 과정에서 유엔과 공동작업자로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 왔으며 유엔 SDGs에서도 협동조합은 중요한 실행 파트너로 명시됩니다(자료 2).

또한 ICA는 SDGs가 채택된 이듬해인 2016년 세계협동조합의 날 주제를 “2030년을 향한 협동조합: 지구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의 파트너십 (Co-ops for 2030: A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partnership)”으로 공표하고 모든 협동조합 부문에서 자신들의 사명과 비전, 사업에 SDGs 목표에 정렬시켜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실행에 옮기자고 제안했습니다(자료 1)

자료 1 (2016년 ICA 안탈라 총회에 제출된 Sustainability Report Guidebook에서)

(6) 분류표 예시 (이주희 옮김)			
SDG	UN지표	협동조합분류	과제 (예시)
빈곤근절	모든 형태의 빈곤을 모든 지역에서 종식시킨다.	보험	2017년까지 취약계층의 조합원에 저비용정책을 00증가한다
2. 기아종식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며 영양상태를 개선하며 지속가능농업을 증진한다.	농업	2016년까지 지속가능한 개간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3. 건강 및 웰빙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Well-being)을 증진한다.	의료	2018년까지 모든 협동조합(병원)에 품질인증을 달성한다.
4. 양질의 교육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기회를 증진한다.	학교	2018년까지 학생수를 00늘린다.

자료 2

(이행수단) 41. 국내, 국제사회의 공적 자금은 필수 서비스와 공공재 공급, 타 재원 유치에 촉매작용을 한다. 우리는 소기업에서 **협동조합**, 다국적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조직 및 자선단체 등 다양한 민간부문이 새로운 의제 실행에 역할이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67. 민간기업의 활동, 투자, 혁신은 생산성 및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주요 추진자이다. 우리는 소기업에서 **협동조합**,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우리는 이러한 민간부문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창조성과 혁신을 발휘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UN기업과 인권이행원칙, 및 국제노동기구 노동기준, 아동의 권리조약 및 주요한 다국간 환경협정 등의 조약당사국들은 각 합의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 보건기준을 준수하면서 역동적이며 충분히 기능하는 민간부문의 활동을 발전시킨다.

: 2015.9.25. 유엔총회 결의문 70/1, Transforming our worlds: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중에서

○ ICA는 협동조합 임팩트투자기금(Global Co-operative Impact Fund)을 2015년에 발족, 1500만 유로 (1조 9천억)을 조성, 10년 동안 SDGs 실현을 위해 투, 용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주 대상은 아프리카의 농업으로 SDGs 1(빈곤퇴치) 2(기아 종식)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현재 이 기금은 프랑스의 협동조합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사회사인 Impurse Europe이 운영합니다.

○ 한국에서도 2015년 글로벌사회적경제포럼(GSEF) 운영위원회 행사(2015.11.05.)로서 <한국사회적경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대화>가 열렸고 2016년 한국협동조합학회 추계학술대회(11.11.) 주제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한국협동조합의 역할”이었습니다.

○ 국제적으로는 유엔사회발전연구소(UNRISD)가 2017-8년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the SDGs:Spotlight on the Social Economy in Seoul 연구를 실시, 보고서가 기관 웹사이트에 공표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SDGs에 비추어볼 때 어떤 임팩트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집계,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 보고서는 249개 서울시사회적경제조직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서울시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SDGs 중 10(불평등 감소), 1(빈곤퇴치), 11(지속가능도시와 공동체들),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12(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3(건강 및 복지 증진), 9번째(지속가능한 산업기반, 혁신 장려) 목표를 달성하는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p.20).

○ 사회적경제조직은 SDGs 실현에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ICA와 EU파트너십(#coops4dev)를 맺어 SDGs 실현, 특히 좋은 일자리와 청년에 초점을 둔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에 재정을 투입하였습니다.

○ 또 여담이지만, 이웃 나라 일본의 SDGs 실천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내각부에 SDGs 담당 장관을 설치하고 SDGs 실현 미래도시 10곳을 선정, 도시를 개조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SDGs 실현을 향한 정부 정책을 질의하고 주요 기업도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SDGs 실현에 비추어 설명하는 태세가 주류화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진영도 적극적입니다.

자료 3. 일본의 SDGs 실천 주류화 사례

아사히신문 웹판(2018.11.29.)에 게재된 일본협동조합의 SDGs 관련 활동

도쿄 보건생협의 활동을 SDGs에 정렬하여 소개하는 웹사이트

참의원 예산소위원회에서 SDGs 정책 질의 장면(2019.10.6.)

○ 한국의 사회적경제조직에서도 SDGs를 다루기도 했으나 아직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제로서 집중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듯합니다. 이는 주요 기업, 지자체 및 정

vision 1 생활의 안심	안전한 먹거리	10
	신용안전 시스템	12
	생활안과 자원봉사	14
	올라라 소비의 확산	16
	라이프케어를 위한 실천	18

vision 2 사람 중심 경제	조합원 현황	20
	아이펀넷 일자리	24
	오아시스과 지역협동조합	26
	지능기반의 조성과 사용	28
	한국사회와경제사회이슈	30

vision 3 더 나은 미래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기여	32
	세계와 개척하는 공동무역	34
	일자리 현황	38
	친환경 유통시장 플랫폼	40
	환경을 살리는 우리일 소비	4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189개국이 2015년 제정한 목표로 17개 목표, 169개 세부 목표를 담고 있으며 2030년까지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성장만 추구하는 사회의 한계를 넘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 환경의 지속가능 발전, 삶의 질, 교육, 평화, 건강, 기후, 에너지, 불평등, 사회의 역할, 평화, 안전, 정의,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번영, 기후 변화, 해양, 육지 생태계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호 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연차보고서는 아이펀넷의 사업, 활동과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연관성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한국사회적경제 씨앗재단

아이펀넷은 상장의 혜택을 모두가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적경제씨앗재단은 조합원 생산자 직원들의 개인 후원과 이익을 내는 법인 사업체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공익재단으로서 아이펀넷의 성과를 함께 나누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개인 후원자 65명으로 시작하여 2017년에는 163명으로 확대되었으며 매년 조성되는 기금 규모도 증가하여 현재는 연간 10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씨앗재단은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사람 중심 경제를 만들어 가는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지역조합과 함께 하는 나눔사업

지역조합 나눔사업은 5년에 이어오고 있는 씨앗재단의 대표적인 공익배분사업입니다. 지역조합이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나눔사업을 기획하여 씨앗재단에 신청하면, 씨앗재단은 지역조합이 조성한 모금예안금 최대 100만원까지 1:1 매칭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총 73개 지역조합이 나눔사업에 참가 신청을 했으며, 지역조합이 총 19억2천만원의 신청하고 씨앗재단이 6,500만원을 지원하여 총 사업금액이 1억 8,6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취약계층 낙후지역 지원을 통한 대사회 연대

2017년 한국사회적경제씨앗재단은 취약계층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397,380만원의 의료지원, 5,790만원의 교육지원, 1억 4,486만원의 사회통합지원을 제공했습니다. 3년째 구례군에 산부인과 전문 진료서비스 제공을 지원해 왔습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전검사 및 특검-예방검종 등을 지원하고 있고, 전국 14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협약하여 114명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낙후지역 인계 양정을 위해 대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과 발탁기금 등 약 6,500만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나 생용자 시대를 통해 상처받은 유가족 및 피해자들을 위해 심리치유센터 운영 및 치유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개발국 주민들을 위한 정수기 설치

아이펀넷이 공급하는 정수인 지리산수를 마신 후 재판매가 가능한 F20 제품의 매개를 수거하면, 씨앗재단은 마개 1개 당 30원을 매칭하여 기금을 조성합니다. 이 기금은 국경없는의사회와의 협력하여 저개발국의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정수기 설치 사업에 지원됩니다. 2017년 지리산수 602,019,966개가 판매되고, 95만4,507개의 마개 수거되었습니다. 마개 판매기금은 58만8,660원이고, 씨앗재단 매칭 기금은 2,910만2,070원입니다. 이 기금으로 2017년 캄보디아에 22개 정수시설을 설치하여, 8천여 명의 캄보디아 주민들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해소
- 7 양질의 일자리, 여성과 여아의 역할 강화
- 2 건강한 삶 보장, 전 연령 인구에 복지 증진
- 13 기후 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보전
- 10 양질의 교육 보장, 평생학습 기회 증진
- 16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 완화

2018년엔 미얀마 38대, 캄보디아 37개 정수시설 설치

전체토론


좌장: 정건화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민석 LG전자 CSR팀 부장

김형수 사회적기업 트리플래닛 대표

김정태 MYSC 대표

김형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사회적 경제…
순환과 회복의
경제를 꿈꾸다”**